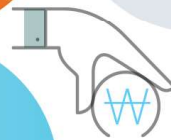


---

#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2020. 12.



kipf

본 보고서는 OECD에서 발표(2020.12.1)한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 연구진

- 김우현 부연구위원
- 김정은 선임연구원
- 서동규 연구원
- 이재원 연구원
- 배소민 위촉연구원

● 목 차 ●

<b>I. 거시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b> .....	<b>1</b>
1. 서론 .....	1
2. 부분적이고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 .....	2
3. 지속적인 불확실성 하의 점진적 회복세 .....	8
4. 정책 제언 .....	13
<b>II. 최근 정책 과제에 관한 이슈 노트</b> .....	<b>21</b>
1. 구글 트렌드 기반 OECD 주간 활동 추적기 .....	21
2. COVID-19 사태로 인한 파산과 과잉 부채: 리스크 평가 및 정책 대응 .....	25
3.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변화: 추진요인과 남은 과제 .....	30
4. 줄타기: 바이러스를 억누르고 봉쇄조치를 피하며 .....	33
<b>III. OECD 회원국과 비OECD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b> .....	<b>40</b>
1. 호주 .....	40
2. 오스트리아 .....	43
3. 벨기에 .....	45
4. 브라질 .....	47
5. 캐나다 .....	49
6. 칠레 .....	51
7. 중국 .....	53
8. 덴마크 .....	55
9. 유로 지역 .....	57
10. 핀란드 .....	60
11. 프랑스 .....	62
12. 독일 .....	64
13. 그리스 .....	66
14. 인도 .....	68
15. 인도네시아 .....	71
16. 이탈리아 .....	73
17. 일본 .....	75
18. 한국 .....	77
19. 룩셈부르크 .....	79
20. 멕시코 .....	81
21. 네덜란드 .....	83
22. 뉴질랜드 .....	85
23. 노르웨이 .....	87
24. 포르투갈 .....	89
25. 스페인 .....	91
26. 스웨덴 .....	93
27. 스위스 .....	95
28. 터키 .....	97
29. 영국 .....	99
30. 미국 .....	101

## I. 거시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 1. 서론

-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2021년 말경에는 백신이 폭넓게 보급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향후 2년 동안 글로벌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나 회복세는 국가별로 불균등할 전망(<표 I-1>)
- 세계 GDP는 올해 -4.2%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난 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2%와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1년 말경에는 세계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주요국들의 경제 실적은 국가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I -1> 세계경제전망

(단위: %)

	2013-2019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0 Q4	2021 Q4	2022 Q4
<b>실질 GDP 성장률<sup>1</sup></b>								
세계 <sup>2</sup>	3.3	2.7	-4.2	4.2	3.7	-3.0	3.8	3.8
G20 <sup>2</sup>	3.5	2.9	-3.8	4.7	3.7	-2.3	3.6	3.9
OECD <sup>2</sup>	2.2	1.6	-5.5	3.3	3.2	-5.1	3.7	2.9
미국	2.5	2.2	-3.7	3.2	3.5	-3.2	3.4	2.9
유로 지역	1.8	1.3	-7.5	3.6	3.3	-7.3	4.7	2.9
일본	0.9	0.7	-5.3	2.3	1.5	-3.2	2.0	1.5
Non-OECD <sup>2</sup>	4.3	3.6	-3.0	5.1	4.2	-1.2	3.8	4.5
중국	6.8	6.1	1.8	8.0	4.9	5.4	4.1	5.4
인도 <sup>3</sup>	6.8	4.2	-9.9	7.9	4.8			
브라질	-0.5	1.1	-6.0	2.6	2.2			
<b>실업률<sup>4</sup></b>	6.5	5.4	7.2	7.4	6.9	7.2	7.3	6.6
<b>인플레이션<sup>5</sup></b>	1.7	1.9	1.5	1.4	1.6	1.2	1.5	1.7
<b>재정수지<sup>6</sup></b>	-3.2	-3.0	-11.5	-8.4	-5.7			
<b>세계 실질 무역성장률<sup>1</sup></b>	3.3	1.0	-10.3	3.9	4.4	-9.9	5.1	4.1

주: 1. % 변화

2.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GDP의 이동 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3. 회계연도 기준

4. 노동인구 대비 %

5.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private consumption deflator)

6.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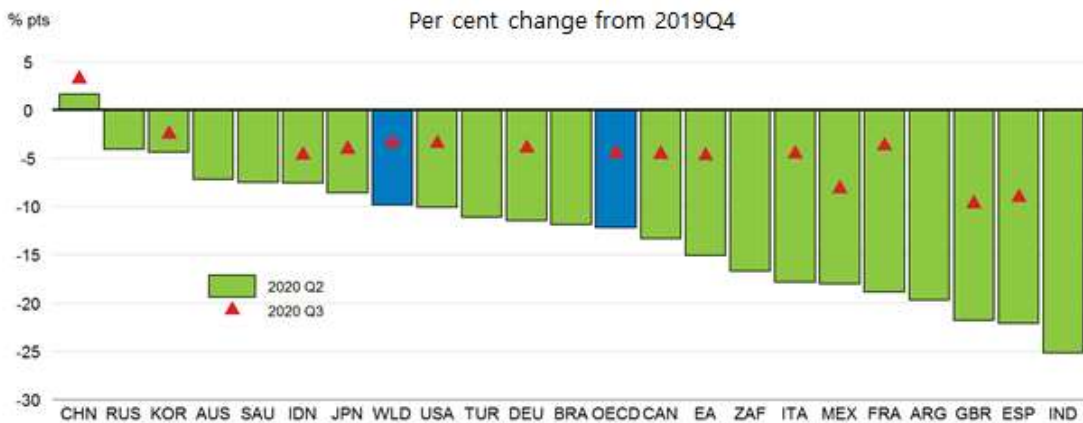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Table 1.1.

2. 부분적이고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

■ 올해 상반기의 전례 없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2020년 2분기 세계 GDP는 2019년 4분기 대비 10%가 하락하였으나, 봉쇄조치가 완화되고 가계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3분기에는 급격히 회복됨 ([그림 I-1])

○ 이러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3분기 선진국들의 GDP는 팬데믹 이전수준보다 4.5%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경험했던 GDP 최대 감소 수준과 유사함

[그림 I -1] GDP는 2020년 상반기에 급감한 뒤 2020년 3분기에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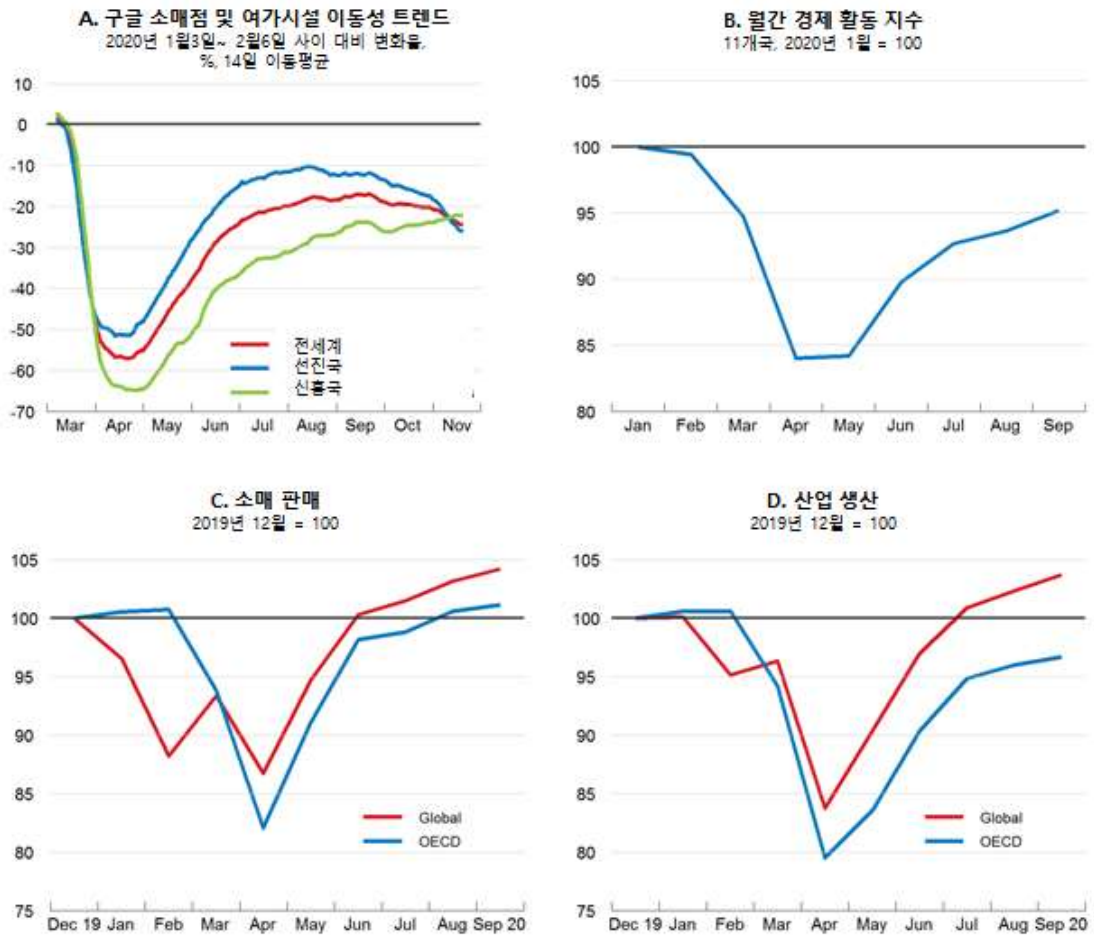


주: 세계 GDP와 OECD GDP는 PPP를 가중치로 총합(PPP-weighted aggregate) 산출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1.

■ 봉쇄조치 완화 후 경제는 반등하였으나 회복세는 최근 둔화되고 있음

- 일일 이동성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하여 봉쇄조치가 더 엄격해지자 선진국에서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그림 I-2], Panel A)
-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지수 추정치 자료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1월과 4월 사이에 감소한 총생산의 2/3만이 9월까지 회복됨([그림 I-2], Panel B)
- 회복세는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활동이 재개되자 가계소매지출(household retail spending)과 같은 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반등함([그림 I-2], Panel C)
- 중국의 강세에 힘입어 세계 산업생산도 회복되었으나, 많은 선진국에서 산업생산 지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I-2], Panel D)

[그림 1-2] 둔화되고 있는 회복세



주1: Panel A와 Panel B는 PPP로 가중평균 산출

주2: Panel A에 중국 데이터는 불포함

주3: Panel B의 11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핀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미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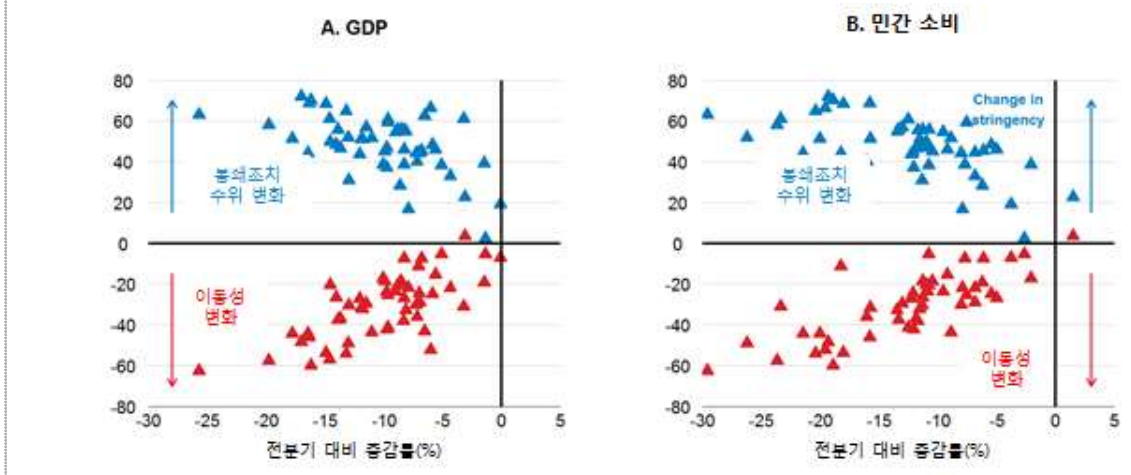
주4: Panel C에서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소매 판매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월간 가계소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월간 소비총합지수(synthetic consumption indicator)를 사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3.

[참고 1] 봉쇄조치와 이동성으로 2020년 2분기 경제실적의 국가 간 차이 설명

- GDP 성장률과 민간 소비 증감률로 나타난 경제실적은 봉쇄조치의 수위 및 이동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I-3])
- 2020년 2분기 GDP와 민간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변화율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2020년 2분기 국가별 봉쇄조치의 수위 및 이동성 변화를 설명변수로 두고 경제지표들과의 관계를 계량분석
  - 전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실질 GDP와 민간 소비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사용
  - 봉쇄조치의 수위는 Oxford stringency index를 사용하고, 이동성(mobility)은 구글 소매점 및 여가시설 이동지수(이하 구글이동성지수)를 사용하여 분석
- 봉쇄조치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동성이 감소할수록 성장률은 감소
  - Oxford stringency index가 10점이 올라가면 분기 GDP 성장률이 1%p 감소
  - 구글이동성지수가 10점이 감소하면 분기 GDP 성장률이 1.7%p 감소
- 봉쇄조치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동성이 감소할수록 민간 소비는 감소
  - Oxford stringency index가 10점이 올라가면 분기 민간소비 증감률이 0.6%p 감소
  - 구글이동성지수가 10점이 감소하면 분기 민간소비 증감률이 2.8%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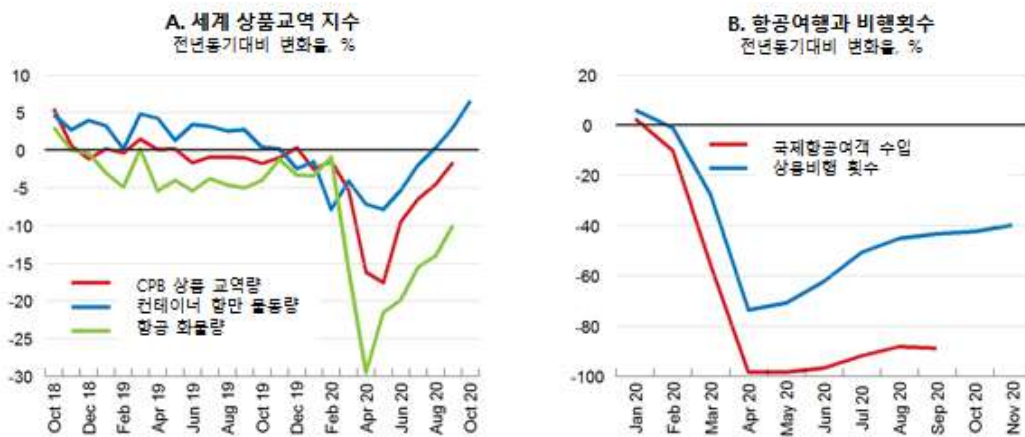
[그림 I-3] 2020Q2 경제실적과 국가별 봉쇄조치 및 이동성간의 연관성



주1: 분석 대상 국가는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 중 자료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Panel A와 B에서 각각 49개와 43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  
 주2: 수직축은 Oxford stringency index와 구글이동성지수의 분기 평균값의 변화를 나타내며, 봉쇄 조치 수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Oxford stringency index가 높으며 이동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구글이동성지수가 낮게 나타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2.

- 2020년 상반기 세계교역량은 급격히 줄었으며, 해외여행이 감소함에 따라 관광산업은 크게 위축됨([그림 I-4])
  - 2020년 상반기 상품 교역량은 팬데믹 이전보다 16% 감소할 정도로 세계교역량이 급격히 줄었으나 천천히 회복되는 추세임
    - 마스크 및 보호 장구, 재택근무 관련 제품 등의 수요 상승에 힘입어 특히 중국과 한국 등에서 컨테이너 항공 물동량이 증가
  - 항공 여객 수송량은 매우 낮은 상태로 관광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 수익(export revenue)에 타격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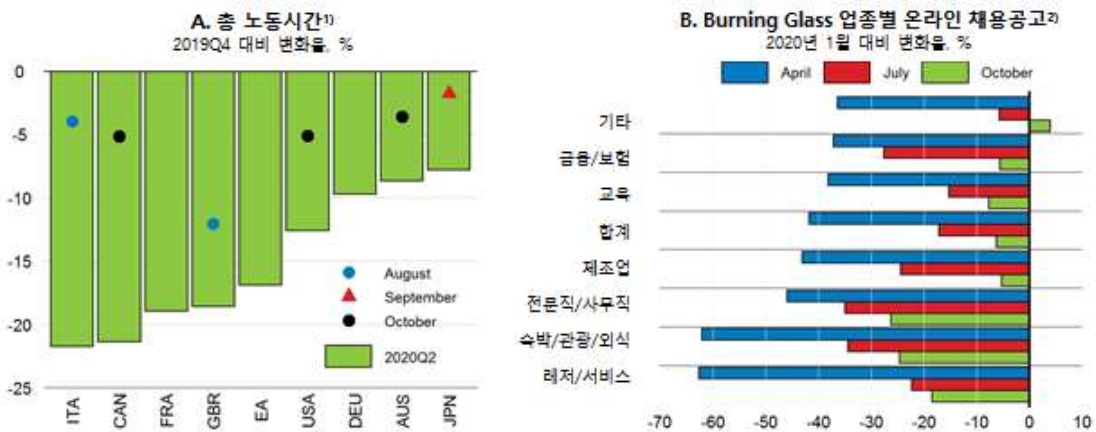
[그림 I -4] 세계무역은 천천히 회복되는 추세이나 해외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0, Figure 1.7.

- 노동시장 여건은 팬데믹이 절정일 때 급격히 악화되었다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나 그 양상은 국가별, 산업부문별 차이가 있음
  - 중위 OECD 국가의 9월 실업률은 팬데믹 직전보다 약 1.25%p 높은 수준이나 국가별 차이가 존재
    - 고용유지제도를 적극 실행한 일본과 유럽국가들은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국 및 캐나다와 몇몇 신흥국에서는 팬데믹 이후 실업률이 크게 상승
    - 중위 OECD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 대비 3%p가 상승하여 청년층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총 노동시간과 노동수요는 급격히 하락한 후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나(그림 I-5), 산업부문별, 하위그룹별로 차이가 존재
    - 총 노동시간과 고빈도 지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온라인 채용공고 수는 봉쇄 조치와 해외여행제한 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 부진함
    - 많은 국가에서 저숙련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이 특히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팬데믹 이전에 존재하던 양극화가 심화됨

[그림 I-5] 서서히 회복 중인 노동시장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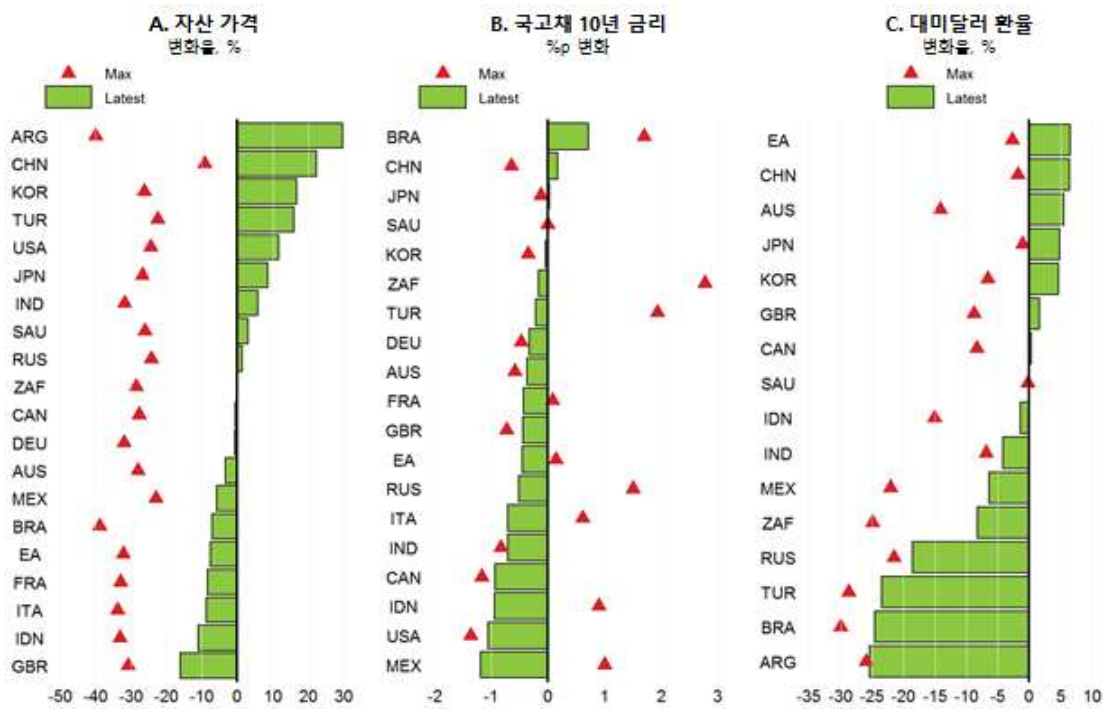
주1: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경제 전체의 총 노동시간 자료 사용, 미국의 경우 비농가(non-farm) 업종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자료 사용, 일본의 경우 총 취업자 수와 취업자의 월간 평균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추정, 이탈리아의 8월 자료는 산업서비스부문에서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를 바탕으로 추정

주2: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의 온라인 채용공고를 바탕으로 계산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10.

- 각국 중앙은행의 신속한 대처로 금융시장 여건은 정상화됨
  - 팬데믹의 유행과 봉쇄조치로 3월과 4월에 금융자산 가격은 역대 규모로 감소하고 경제전반에 변동성이 급증하였으나, 이후 자산 가격은 반등하고 변동성 지수도 예년 수준으로 돌아옴
  - 대규모 양적 완화의 여파로 장기 국채 수익률은 크게 하락하였고, 많은 선진국에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대부분 반등함

[그림 1-6]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금융시장 여건



주1: "Latest"는 2019년 말 대비 2020년 11월 26일 까지 가장 최신 데이터와 비교하여 계산, "Max"는 2019년 말 대비 변화가 가장 큰 값 계산

주2: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의 온라인 채용공고를 바탕으로 계산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12.

### 3. 지속적인 불확실성 하의 점진적 회복세

■ (전제의 불확실성) 세계경제 전망은 COVID-19 확산 강도, 지속기간, 유행의 빈도에 더해 방역의 효과, 백신의 보급 등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 2021-22년 경제 전망에 있어 2021년 말경에는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전제
  - 전세계적으로 백신이 완전히 보급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 유행이 반복될 것임
- 최소 6~9개월은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국가별로 봉쇄조치 시행 정도와 경제자신감의 회복 정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것임
  - 국가별로 봉쇄조치와 이동제한조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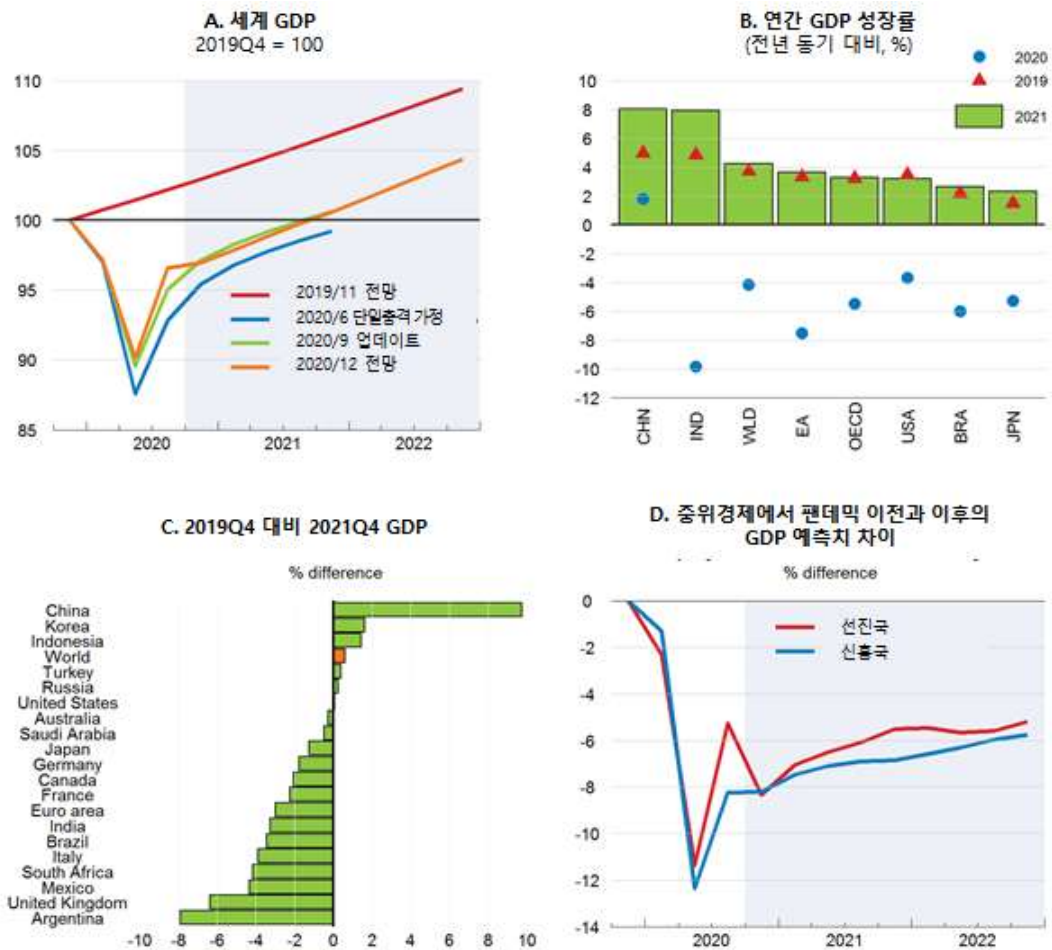
#### 가. 경제 전망

■ (경제 전망) 향후 2년(2021~22년) 동안 세계경제는 2020년의 경기침체에서 서서히 회복하나, 회복세는 국가별로 불균등할 것으로 전망

- 세계 GDP는 2020년에 -4.2%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2%,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표 I-1]; [그림 I-7] Panel A)
  - OECD 국가의 GDP는 2020년 -5.5%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3%,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말경에는 세계 GDP가 2019년 말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별로 차이 존재([그림 I-7] Panel C)
- GDP는 팬데믹 이전 전망치보다 계속해서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그림 I-7] Panel D)
  -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GDP 전망치 차이는 중국, 한국, 일본과 몇몇 북유럽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1~2%)일 것으로 전망됨
  - 중위 선진국과 중위 신흥국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팬데믹으로 인해 상실한 소득 규모는 지난 4~5년간의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규모와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들의 경제발전은 국가별 차이를 보이며 전개될 전망([그림 I-7] Panel B)

- 미국의 GDP는 2020년 -3.7%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2%와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GDP는 2020년 -5.3%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3%,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존의 GDP는 2020년 -7.5%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2021~22년 3%대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2021년과 2022년 8%와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

[그림 I -7] 팬데믹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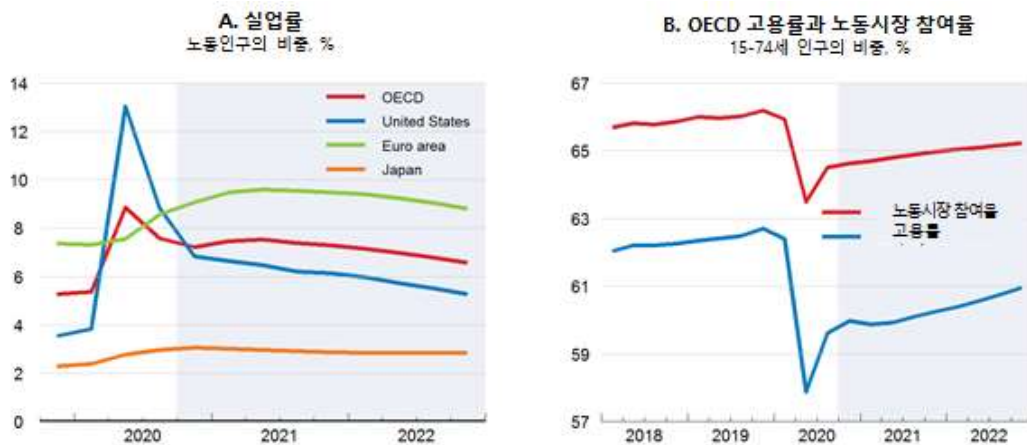
주: Panel A에서 2019/11 전망의 2022년도 GDP는 2019년도 11월 전망(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9)에서 계산한 2021년도의 잠재적 성장률을 바탕으로 추정된 것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13.

■ (노동시장 전망) 노동시장은 여건은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

- OECD 국가의 실업률은 2020년도 4분기에 7.2%를 기록하고 2년 후에는 0.7%p 정도의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그림 I-8) Panel A)
- 고용률과 노동시장 참여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팬데믹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시사(그림 I-8) Panel B)
  - 일부 국가에서 한시적 임금 및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함에 따라 고용률의 상승세는 제약될 것으로 전망
  - 실망노동자들(discouraged worker)과 실업기간이 길어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율을 낮출 수 있음

[그림 I -8] 노동시장 여건은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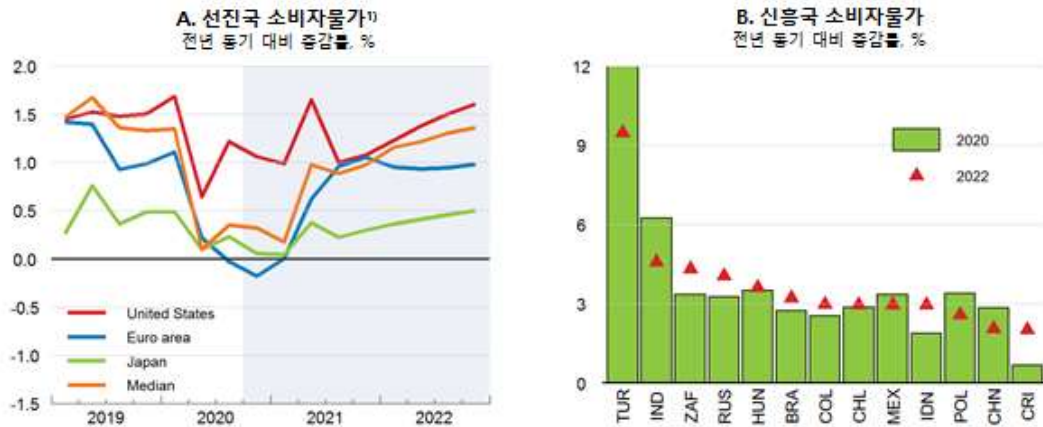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14.

■ (물가상승률 전망) 수요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2021~22년에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

- 선진국 물가상승률은 2020년 상반기에 급격히 하락한 후 반등하였으나, 2021년에도 낮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2년 말경에 이르러서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그림 I-9) Panel A)
- 향후 2년간 신흥국 물가상승률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그림 I-9) Panel B)

[그림 I-9]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주: 선진국은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터키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을 포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15.

### 나. 전망의 위험요인

■ (전망의 위험요인)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 위의 기준 전망(baseline projections)은 2021년 말경까지 백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백신의 생산과 보급이 이보다 빠른 경우와 늦을 경우를 나누어 두 가지 시나리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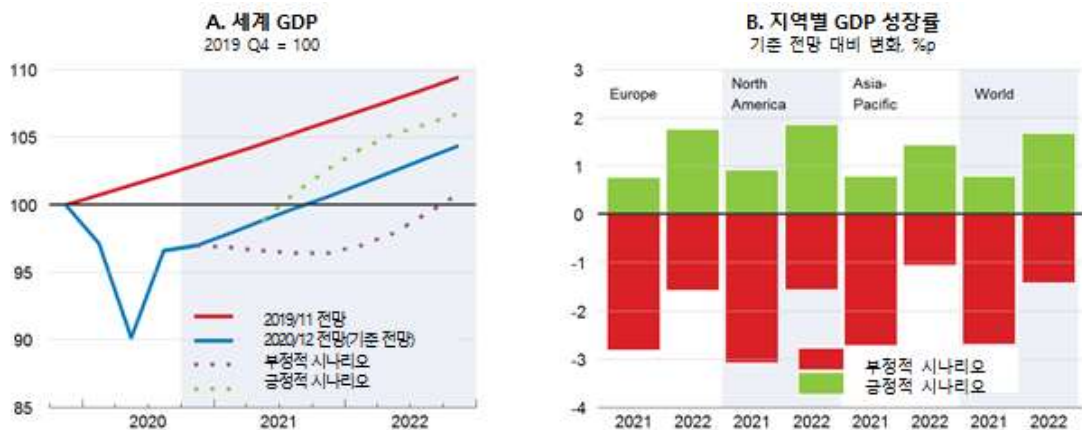
- 긍정적 시나리오에서는 백신이 조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기준 전망에서보다 경기 회복의 자신감과 소비를 더 빠르게 회복
  - 2021년 하반기부터 내생적 저축률이 감소하기 시작
-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백신의 생산과 보급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봉쇄조치가 연장되고 경기 회복 자신감이 하락하며 예비적 저축은 상승

○ (긍정적 시나리오) 정책금리는 기준 전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되며, 자동안정화 장치의 작동으로 재정수지는 개선됨

-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와 5.4%로 전망되어, 기준 전망보다 각각 0.8%p와 1.7%p 높은 성장률이 예상됨(그림 I-10} Panel A)
- 모든 지역에서 GDP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더 빨리 회복하고(그림 I-10} Panel B),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GDP 전망치 차이가 반으로 감소(그림 I-10} Panel A)

- 저축률의 감소, 가계소득의 증가와 함께 실업률이 1%p 감소하면서 선진국의 민간소비는 3% 이상의 성장을 기록
  - 중위 선진국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p 감소
- (부정적 시나리오) 정책금리는 기준 전망 대비 낮아질 것이며<sup>1)</sup>,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동한다고 가정
-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5%와 2.3%로 전망되어, 기준 전망 보다 각각 2.7%p와 1.4%p 낮은 성장률이 예상됨
  - 2021년까지 경제는 담보 상태에 머물다가 2022년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나 기준 전망보다 낮은 수준에서 성장경로가 지속되며, 2022년 말경에서야 팬데믹 이전수준의 GDP를 회복하여 기준 전망보다 1년 더 늦게 회복([그림 I-10] Panel A)
  - 모든 지역에서 기준 전망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이 아태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그림 I-11] Panel B)
  - 통화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남아 있는 국가의 경우 정책 금리를 2%p 낮춤
  - 중위 선진국을 기준으로 소비는 기준 전망 대비 2% 감소, 2021년 말경에는 자본스톡이 사전적으로 1% 감소, 2022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는 7.5%p 증가

[그림 I - 10] 기준 전망과 긍정적/부정적 시나리오의 비교



주1: Panel B의 지역별 계산값은 PPP를 가중치로 총합 산출  
 주2: Panel B의 아태지역(Asia-Pacific)은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  
 주3: Panel B의 유럽(Europe)은 유로존 국가들과 체코, 덴마크,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을 포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16.

1) 마이너스 금리의 경우는 제외하므로 금리가 음수가 되지는 않으며, 이미 음수인 경우 변화가 없음을 가정

#### 4. 정책 제언

■ (보건 정책) COVID-19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포괄적인 공중보건정책은 계속해서 필요함

- 정부는 대규모 COVID-19 확진자 수치의 급증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 확진자 추적, 격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하며, 적절한 보건 역량과 보호 장비 물량을 갖추어야 함
-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봉쇄조치보다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기적절하게 국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통화 정책) 팬데믹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자산매입, 건전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은 신속하게 완화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시행했으며([표 I-2], [그림 I-11]),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

- 2020년 상반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시행한 조치들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었으며, 여전히 시행중에 있음
-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겨 경제회복 자신감이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면 추가적인 완화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주요국들은 많지 않지만<sup>2)</sup>, 중앙은행은 포워드 가이드스(forward guidance) 강화와 국채매입 규모 확대를 통해 장기금리를 조절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은 수익률곡선 관리를 통해 국채의 장기 수익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음

2) 유로존 지역과 일본에서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이며 미국에서는 근소하게 양의 값을 가짐.

<표 1-2> 2020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및 대출/유동성 지원 조치

일본은행(Bank of Japan)	
자산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채매입을 통해 채권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수익률곡선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li> <li>- CP와 회사채 매입 한도를 당분간 20조엔 규모로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li> <li>- 주가지수 연동형 상장투자신탁(ETF)과 부동산투자신탁(J-REIT)는 당분간 연간 보유잔액 순증 기준 각각 12조엔, 1,800엔을 상한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자산가격의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유도</li> </ul>
대출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특별 오퍼레이션’을 도입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민간채무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공급하거나, 정부의 비상경제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이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120조엔 상한)</li> </ul>
유동성 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담보 오퍼레이션<sup>1)</sup>을 통해 다량의 엔 유동성 공급</li> <li>- 달러자금 공급 오퍼레이션을 통해 다량의 달러 유동성 공급</li> </ul>
유럽중앙은행(ECB)	
자산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을 실시, 총 1.35조 유로 규모의 민간 및 공공 채권을 매입하여 차입비용 감소 및 대출 증가 유도</li> <li>-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에 1,20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입하여 수익률곡선 관리</li> </ul>
대출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LTROs(Targeted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s: 표적 장기대출프로그램)의 대출조건 완화*하여 은행들의 기업·가계 대출을 지원 *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액 확대 등</li> <li>- 적격담보 기준에 대한 한시적 예외 적용, 담보자산 헤어컷(haircut)<sup>2)</sup> 인하 등을 통해 기업과 가계에 신용공급 지원</li> </ul>
유동성 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ROs(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s: 장기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유동성 지원 및 원활한 자금시장 기능을 지원</li> <li>- LTROs 만료 이후 유동성공급팬데믹 긴급장기대출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PELTROs)을 적격담보기준 완화기간 동안 실시하여 유동성 공급</li> </ul>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자산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채, 정부기관 MBS, 정부기관 CMBS 매입을 통해 신용시장의 원활한 작동 지원</li> </ul>
대출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8,500억 달러 규모의 PMCCF(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발행시장 기업신용기구), SMCCF(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를 실행하여 고용주들에게 신용공급 지원</li> <li>- 5천억 달러 규모의 MLF(Municipal Liquidity Facility: 지자체유동성기구)를 실행하여 주·지방 정부에 현금유동성 공급</li> <li>- 6천억 달러 규모의 Main Street Lending Program을 실행하여 중소기업에게 대출지원</li> <li>- 중소기업청이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하에서 보증한 대출에 대해 적격담보로 인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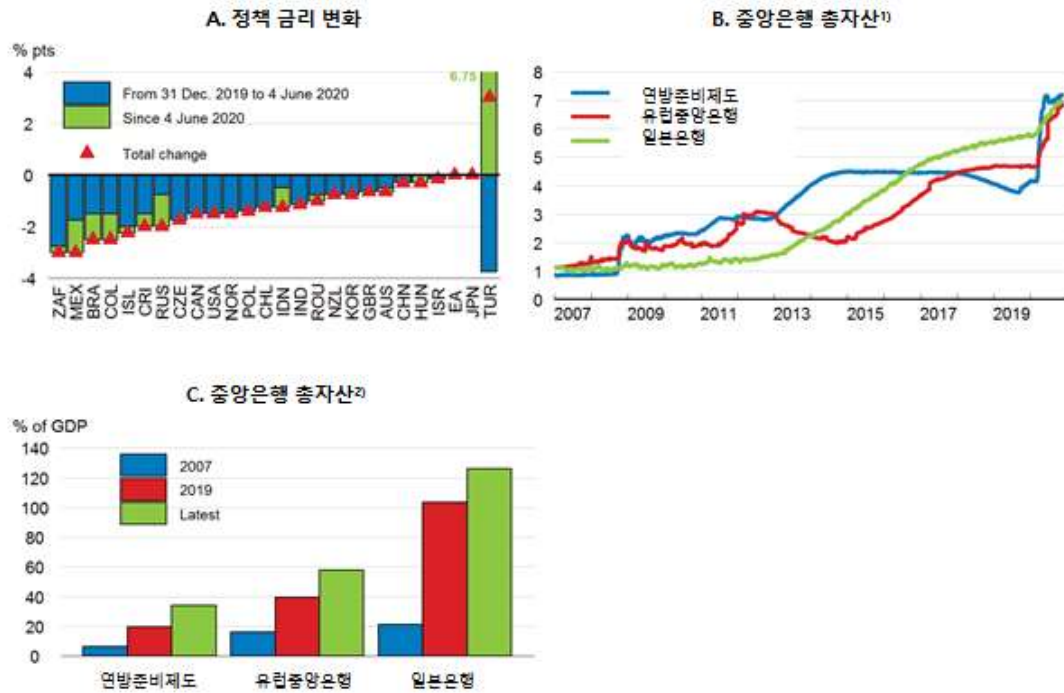
유동성 지원 조치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칙을 수정하여 가계와 기업에 신용공급 지원
	- Repo 종류 추가 및 거래한도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실행과 단기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

주1: 공통담보 오퍼레이션이란 일본은행이 국채, 지방채 등 적격으로 인정한 금융자산을 근담보로 하여 입찰에 의해 결정된 이율로 자금 공급을 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의미

주2: 헤어컷이란 담보자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담보자산의 시장가격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담보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나타낸다.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Table 1.2.

[그림 I -11] 2020년 상반기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는 상당히 완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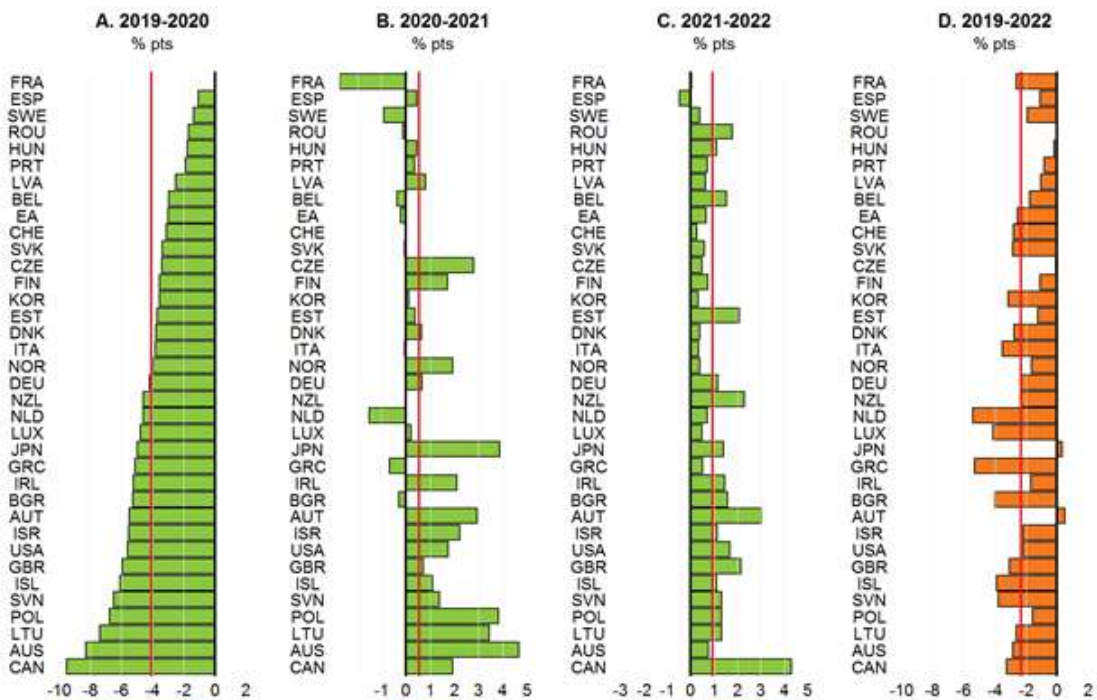
주1: Panel B에서 단위는 조 달러, 조 유로, 백조 엔

주2: Panel C 최근(Latest) 수치는 2019년 GDP 대비 최근 중앙은행 총자산 비율을 나타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18.

- (재정 정책) 전례 없는 부정적인 충격에 대해 적기에 강력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몇 년 간 재정지원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OECD 국가들이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재정지원 프로그램<sup>3)</sup>의 규모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많은 국가들에서 대규모로 실시한 것으로 추산됨
  - 2020년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변화를 기반으로 계산한 재량적 재정정책의 규모는 중위 OECD 국가기준 잠재 GDP 대비 4.2%로 추산되며(그림 I-12] Panel A), 이는 2008년과 2009년 재량지출 규모의 두 배에 달함
  - 2020년 정부소비(public consumption)는 실질 GDP 성장률에 평균적으로 0.4%p 기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몇몇 국가들에서는 기여도가 1%p를 상회하며(그림 I-13] Panel A),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의 규모 대비 두 배 더 큰 수치임

[그림 I -12] 재량적 재정정책 기조는 국가별로 상이  
: 잠재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변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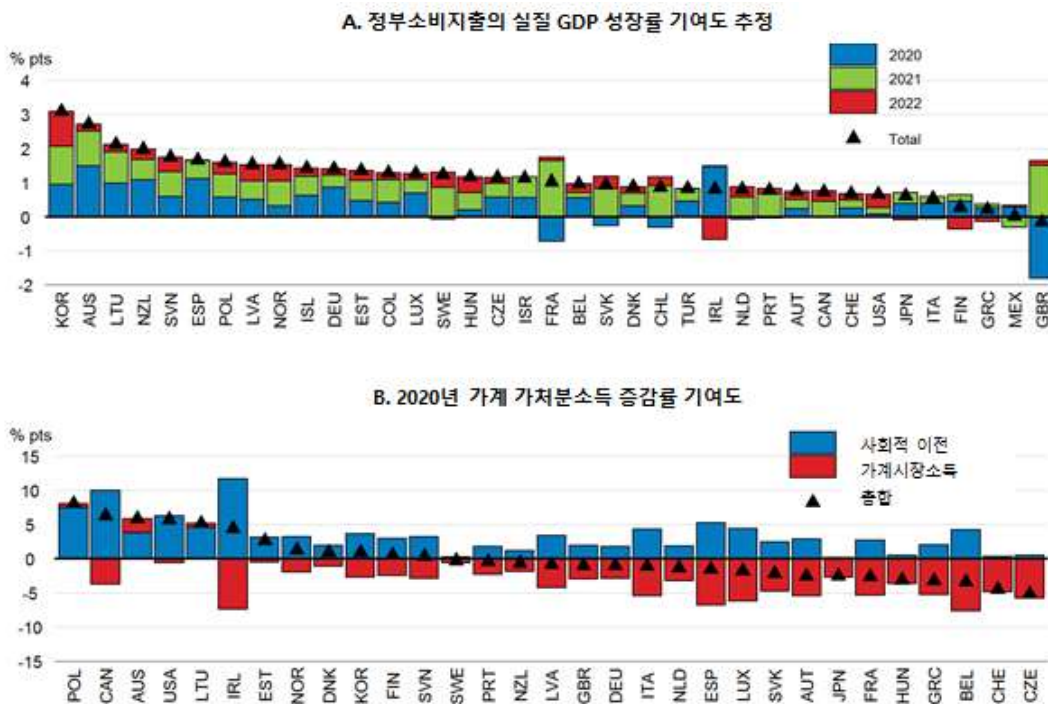
주: 수직선은 중간값을 나타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19.

3) 단축근무 보상제도 확대, 실업수당 보장 강화, 세금감면 및 이연, 대출, 채무상환유예 등을 포함

- 사회적 이전(social transfer)은 가계시장소득(household market income)<sup>4)</sup>의 감소를 상쇄하여 가처분소득의 감소분이 작아지거나 몇몇 국가들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그림 1-13] Panel A),
- 2020년 평균 사회적 이전의 가계가처분소득 기여는 가계시장소득의 감소를 감안했을 때 2009년도보다 30% 더 크게 나타남

[그림 1-13] 재정정책은 성장에 상당히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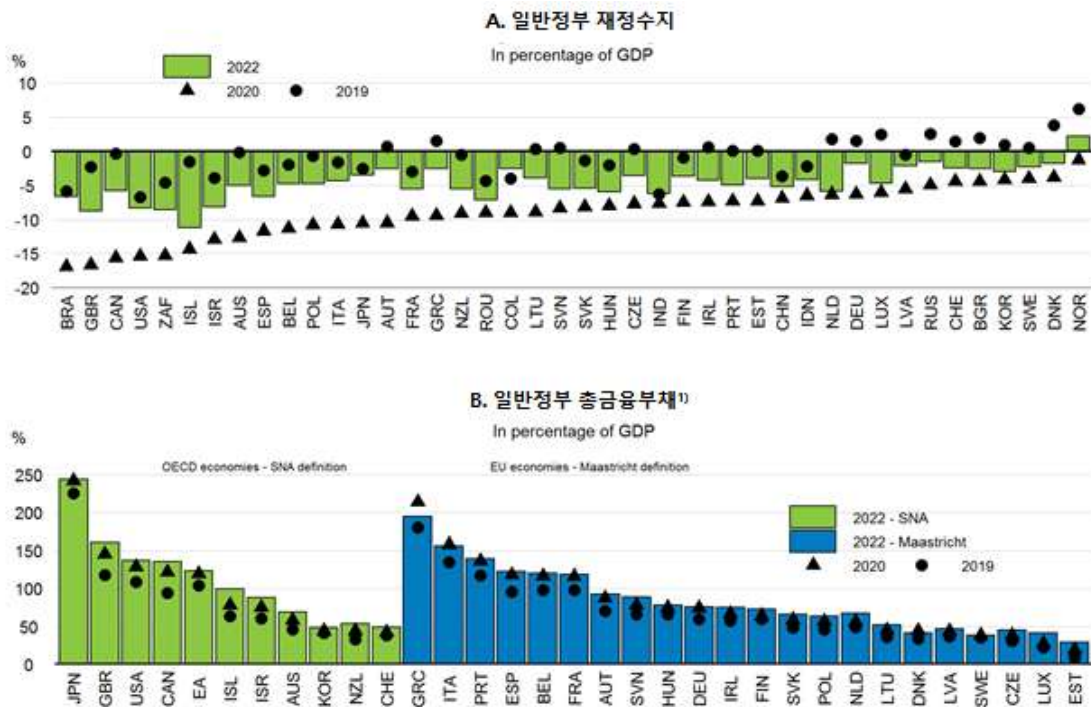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20.

4) 가계시장소득은 가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산한 소득,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제3권 제1호」, 2012)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폭과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당분간은 재정건전화보다 경제회복이 더 우선시되어야 함
  - 자동안정화장치의 작동과 새로운 지원조치의 도입으로 2020년 OECD 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8.3%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는 15%를 상회(그림 I-14] Panel A)
  - 많은 OECD 국가들에서 2021~22년 재정긴축이 전망되나(그림 I-12] Panel B-C), 2020년도의 재정완화를 상쇄할 만큼은 아님(그림 I-12] Panel D)
  - 모든 OECD 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2019년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평균적으로 GDP의 4% 가량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그림 I-14] Panel A)
  -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와 GDP 감소로 인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그림 I-14] Panel B), 중위 OECD 국가 기준 2019년 대비 2022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p 더 높을 것으로 전망
  - 정부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재정건전화는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하고 세수는 감소할 수 있음
  - 2021년에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경제가 다시 취약해질 경우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하고 현재의 재정지원 조치들은 유지되거나 연장되어야 함
- 정부의 지원조치의 규모와 대상은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직격탄을 맞은 부문에 집중지원(targeted support)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1-14]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부채는 증가할 전망



주1: EU 국가들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의해 총국가채무(gross public debt)을 기준으로 나타나 있으며, OECD 국가들은 SNA에 기초하여 총금융부채(gross financial liabilities)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됨, 양자 간에는 ▲마스트리히트 기준의 총채무는 보험책임준비금, 선금 및 신용거래, 주식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스트리히트 기준의 총채무는 채권을 명목가치로 평가하는 반면, SNA 기준의 총금융부채는 발행가격에 발생이자를 합한 금액 혹은 시장 가치로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음.(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09년 9월호」, 2009)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21.

■ 팬데믹의 영향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다른 산업부문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 거리두기와 소비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부문은 총 고용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문들로 이루어져 있음(그림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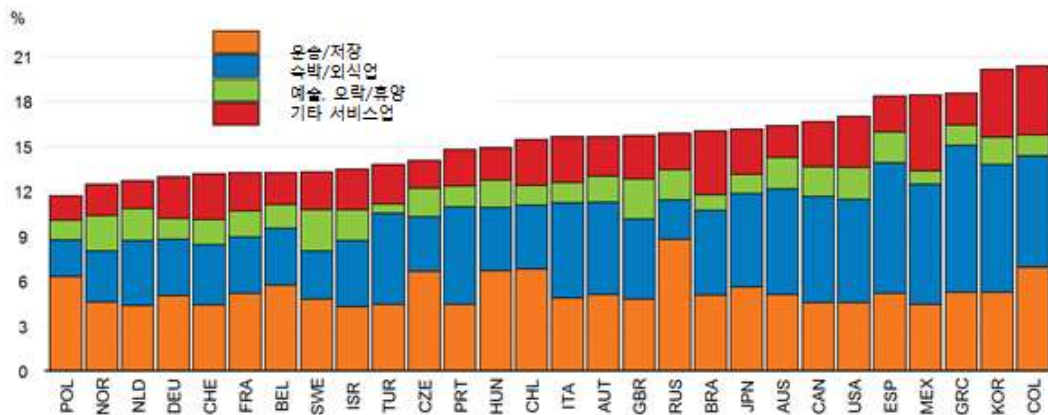
- 산업부문간 자원배분의 재조정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금보조와 같이 직장(job)을 보호하는 지원조치보다 노동자(worker)를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목표일 수 있음
- 봉쇄조치로 인해 타격을 많이 입은 회사와 부문을 집중지원하고 장기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에 자원을 투자

○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른 산업부문으로 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구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교육을 실시

- 정부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일자리에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문 간 이동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노동시간이 단축된 노동자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그림 1-15] 팬데믹의 피해가 큰 분야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분야



주: 호주와 미국의 경우 2018년도 자료 사용, 캐나다의 경우 2016년도 자료 사용, 그 외 국가들은 모두 2019년도 자료 사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1.23.

-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임금 보조, 납세 유예, 보증 등의 지원은 단계적으로 중단하여 자생할 수 없는 기업이 지원으로 연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새로운 투자와 고용에 쓰일 수 있는 재원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음
- 경쟁을 장려하고 상품시장을 개방하여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추구해야 디지털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자본을 재분배할 수 있으며, 일류기업과 그 외 기업들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II. 최근 정책 과제에 관한 이슈 노트

### 1. 구글 트렌드 기반 OECD 주간 활동 추적기

■ 최근 거시 경제 정책 수립에는 정보의 적시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표준적인 지표를 대체할만한 고 빈도의 지표(alternative high-frequency indicator)에 주목

○ 최근 COVID-19 사태는 전파가 빠르고 영향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기존의 경성 지표(hard indicator), 연성 지표(soft indicator) 외에 고 빈도 지표(high-frequency indicator)가 주목을 받음

- 경성 지표는 국가 기관, 통계 기관에서 발행되고, 발행까지 수개월의 시차가 있음
- 연성 지표는 경성 지표보다 시차가 적지만, GDP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 당시에 위기 수준을 파악하는 역할로는 부족함
- 고 빈도 지표는 비행기 이륙, 레스토랑 예약, 공기질 정보와 같이 실시간 혹은 일간 단위의 지표로 정책 결정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함

<표 II -1> 지표별 특성

지표	유형	빈도	발행시기	GDP와의 관계
GDP	경성	분기별 <sup>5)</sup>	통상적으로 분기 종료 1~2개월 후	-
산업 생산 (Industrial Production)	경성	월별	월말 30~55일 후	선형
소매 판매 (Retail sales)	경성	월별	월말 8~10주 후	선형
구매 관리자 지수 (Purchasing Managers' Indices)	연성	월별	다음 달 초	평시 선형, 위기 시 비선형
소비자 신뢰 (Consumer confidence)	연성	월별	다음 달 초	일반적으로 선형, 위기 시 비선형
구글 이동성 보고서 (Google Mobility)	고 빈도	일별	7일 시차	2020년 2월 중순부터 데이터가 존재해 분별 하기 어려움
구글 트렌드 (Google Trends)	고 빈도	일별, 주별, 월별	5일 시차	모형 기반 관계 (Model-based relationshi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Tabl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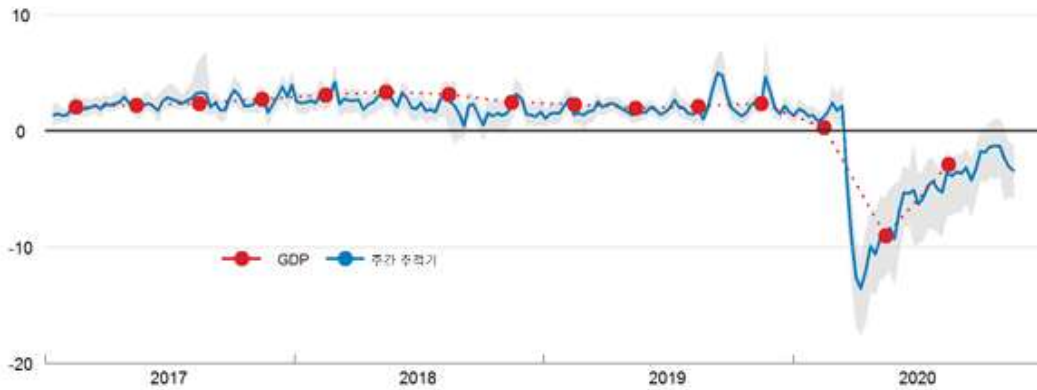
5) 영국, 캐나다, 스웨덴은 월별

- 고 빈도 지표 중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활용하면 1주 단위로 전년대비 GDP 성장률을 추정해 COVID-19 사태와 같은 경제적 위기의 영향 분석이 가능
- 구글 트렌드는 경제 활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방대한 양의 검색 정보 자료로서 경제 예측에 강력한 지표로 사용 가능함
  - 구글 트렌드는 검색 기록 데이터이며 소비, 노동 시장, 산업 활동, 체감 경기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함
  - 따라서 구글 트렌드를 통해 전반적인 거시 경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이 가능함
  - 다만 ‘구글 플루’ 실험<sup>6)</sup>과 같이 제한적 자료로 인한 실패를 막기 위해 다양한 검색어를 사용해야 함
- OECD 주간 추적기 2 단계 모형(Two-Step Model)을 통해 전년대비 주간 GDP 증가율을 추정했음
  - 구글 트렌드 변수 1200개 카테고리 중 경제 분석에 쓰일 215개 카테고리만 선택 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분기별 구글 트렌드 변화와 분기별 GDP의 관계 함수를 도출, 이렇게 추정된 함수에 주간 구글 트렌드 자료를 활용해 전년대비 주간 GDP 증가율을 추정함
- 추정 결과에 따르면 3월의 COVID-19 충격이 2분기 GDP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국가에서 4,5월 경제적 반등이 있었지만 6월에는 반등이 둔화됨
  - 미국의 전년대비 GDP 성장률이 2020년 첫주에 2.4%에서 최대 -14.2%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이는 월간 지표에서 포착할 수 없는 정보로 OECD 주간 추적기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은 격리 조치보다 추적과 검사를 통해 전염병을 통제해왔고, 4% 수준의 가장 낮은 단기 하락을 기록함
  - 여러 국가의 주간 추적기를 통해 봉쇄 정책 해제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한 경제 회복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6) 2009년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통한 인플루엔자 확산 분석 실험으로 2013년 실험 결과 분석 시 바이러스 확산과 무관한 미디어 보도로 인해 부정확한 실험 결과였음을 확인함

[그림 II -1] OECD 주간 추적기: 미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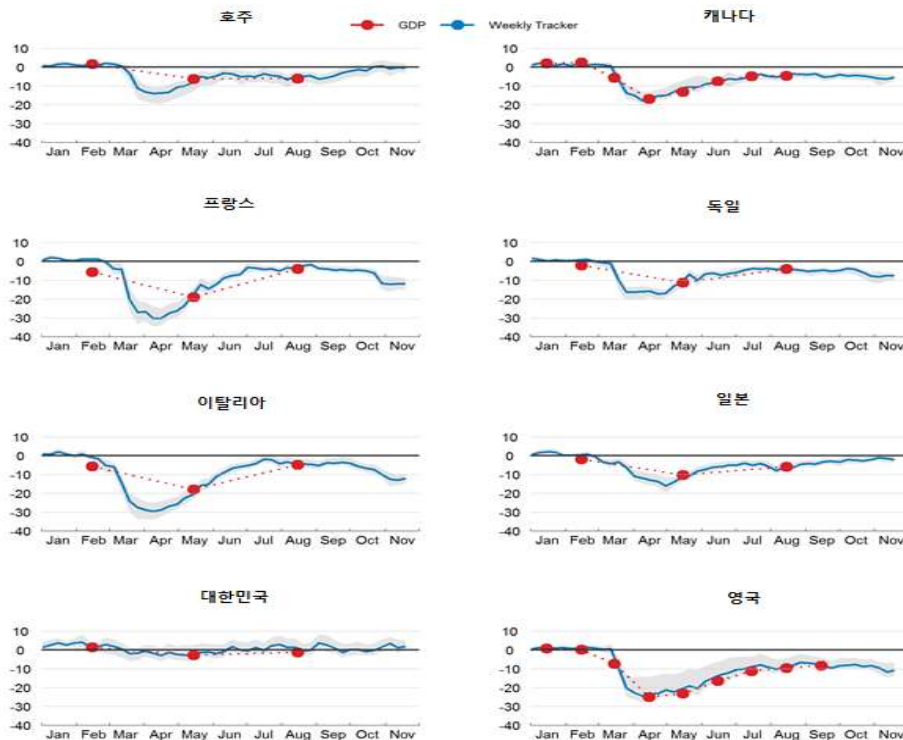


주: 빨간 선은 실제 분기별 GDP 성장률, 파란 선은 추정된 주간 GDP 성장률, 회색 범위는 95% 오차범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2.

[그림 II -2] OECD 주간 추적기: 일부 G20 선진국의 2020년 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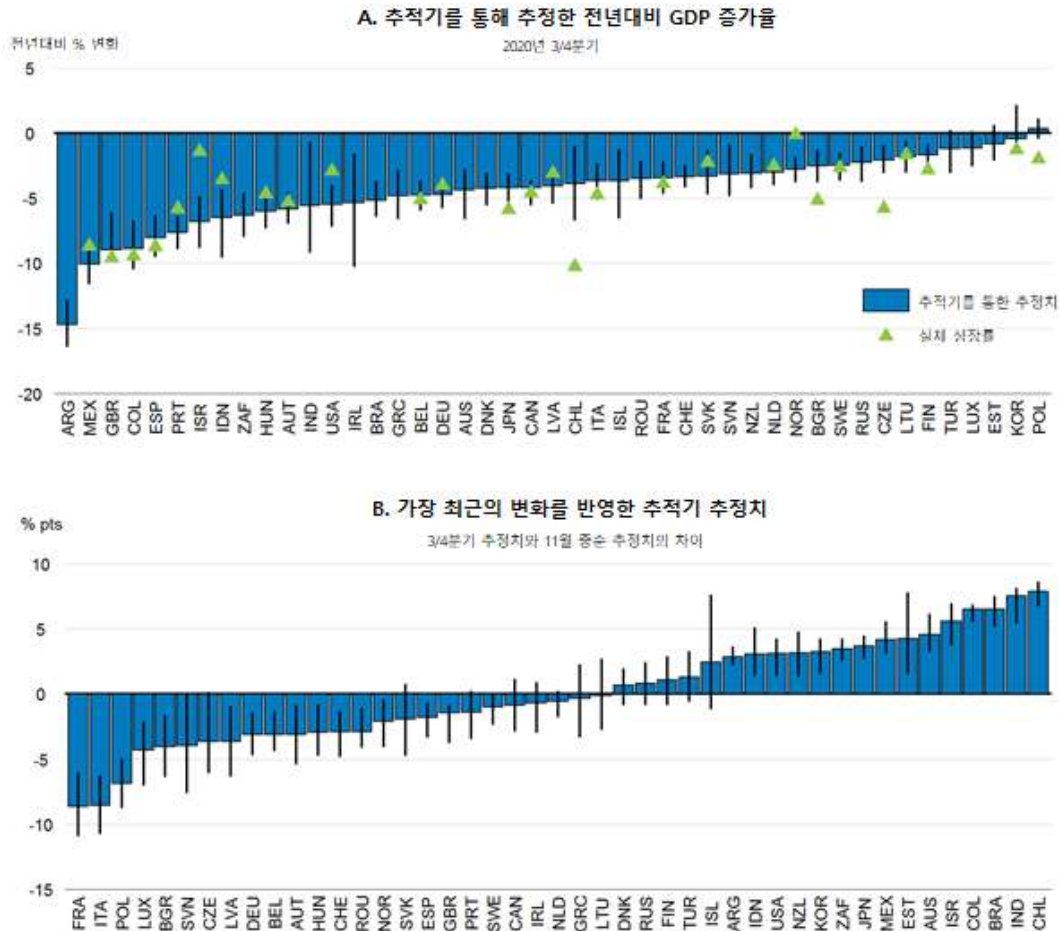
주: 빨간 선은 실제 분기별 GDP 성장률, 파란 선은 추정된 주간 GDP 성장률, 회색 범위는 95% 오차범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3.

- 일부 국가는 2020년 4/4분기에 작년 수준의 경기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OECD 주간 추적기를 바탕으로 보면 경기 회복 수준은 각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는 3/4분기 활동이 작년대비 15%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가장 반등이 약한 것으로 보이고, 멕시코, 영국, 콜롬비아, 스페인 등도 작년대비 8~10% 경제 활동이 낮음
  - 11월 둘째 주까지의 추적기를 통한 추정에 따르면, 2020년 4/4분기 한국, 칠레,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11월 중순 GDP가 작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봉쇄 조치를 강화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봉쇄 조치 강화로 인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그림 II -3] 최근 자료를 반영한 OECD 주간 추적기 추정 결과

(단위: %, %p)



주: 패널 A의 파란 바는 OECD 주간 추적기를 통해 추정된 3/4분기 전년대비 GDP 증가율, 검은 선은 95% 신뢰 구간, 삼각형은 실제 GDP 성장률임, 패널 B의 파란 바는 3/4분기와 11월 중순까지의 평균 추적기 추정값과의 차이이고, 검은 선은 95% 신뢰 구간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2.5.

## 2. COVID-19 사태로 인한 파산과 과잉 부채: 리스크 평가 및 정책 대응

■ COVID-19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했지만, 중장기적 위험을 가지고 있음

○ COVID-19 발생 초기 많은 OECD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은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큰 규모의 부실 위기를 막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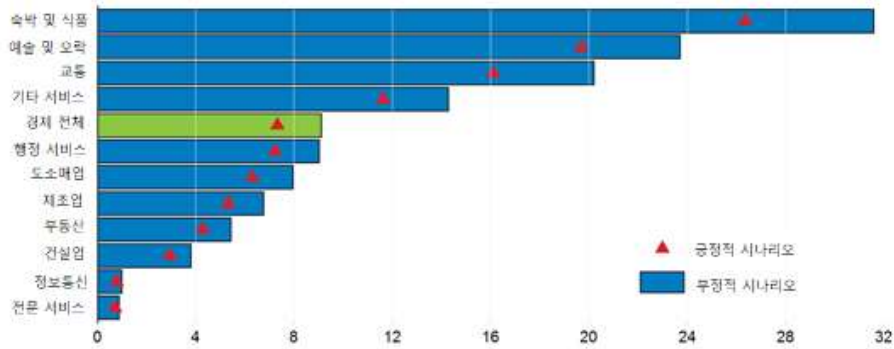
○ 하지만 봉쇄 정책 이후 두 번째 확산에 따른 큰 규모의 충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단기적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의 장기적 리스크를 견뎌내

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었음

- 이에 따라 본 노트에서는 회계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기업의 자기자본과 레버리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회귀 분석을 통해 기업의 레버리지와 투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은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은 더디게 됨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 경제적 충격의 수준을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 위기 초반 정부의 지원책을 반영한 기업의 영업 이익으로 분석
    - 분석을 기반으로 순자본을 추정하고, “NO-COVID-19” 시나리오와 비교해 순자본 차이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증가를 정량화 함
    - 산업 분야별 충격 수준 분석을 위해 긍정적 시나리오(2개월 정도 급격한 경제적 하락)와 부정적 시나리오(긍정적 시나리오보다 더 광범위한 이동성 제한과 추가적 바이러스 확산) 하에서 1차 수요와 공급 충격을 분석해 기업 생존 가능성을 평가
  - 경제 위기의 급격한 이익 감소로 인해 생존 가능한 기업의 일부는 부실기업이 되어 파산 위기를 겪을 수 있음
    - 영업 이익 분석 결과 평시 대비 평균 40~50% 수준의 큰 규모의 이익 감소가 추정됨
    - 시나리오에 따라 평시에는 생존 가능한 기업의 7.3~9.1%가 부실기업이 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6.2~7.7%의 “안정적 직장”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
    - 산업분야별로 보면, 숙박 및 식품 분야는 생존 가능 기업의 부실기업 전환이 26~32% 수준으로 가장 높고, 정보 통신, 전문직은 0에 가까움
    -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낮거나,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부실기업 전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I -4] 산업 분야별 생존 가능 기업의 부실기업 전환 추정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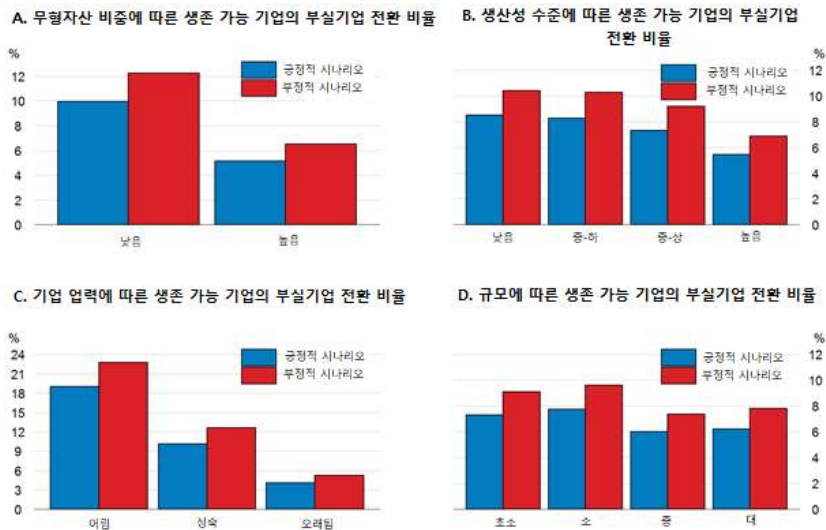


주: 빨간 삼각형은 긍정적 시나리오, 파란색 혹은 녹색의 바는 부정적 시나리오에서 생존 가능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나타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7.

[그림 II -5] 기업 특성 별 부실기업 전환 추정 비율

(단위: %)



주: 빨간 바는 부정적 시나리오, 파란색 바는 긍정적 시나리오에서 생존 가능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나타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8.

○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채를 지고, 상환 능력은 저하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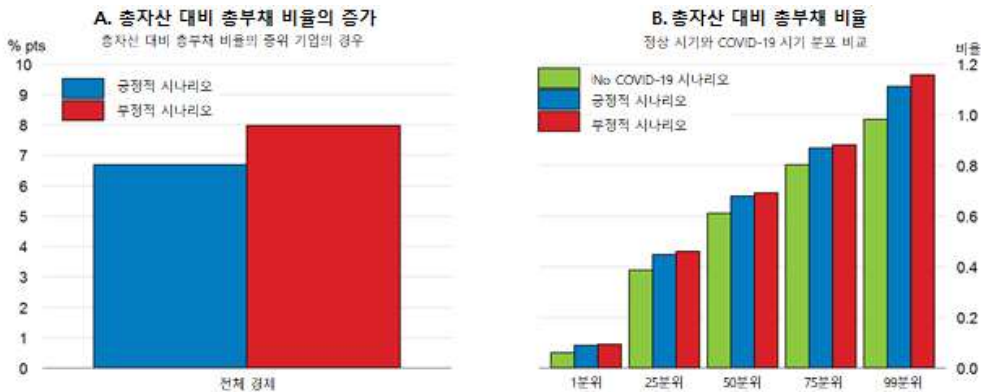
- 순자본 분석 결과 경제 위기로 인한 자본 감소는 레버리지 비율에 영향을 미쳐,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중위 기업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6.7~8%p 증가함
- 마찬가지로 평시에 비해 이자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도 30~36%

의 기업이 이자비용을 충당할만큼 수익을 거두지 못함

- 산업 분야별로 볼 때 숙박 및 식품, 예술,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운송 부문에서 부채 상황이 어려워지고, 연식이 적고,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그림 II -6] 시나리오별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단위: %p,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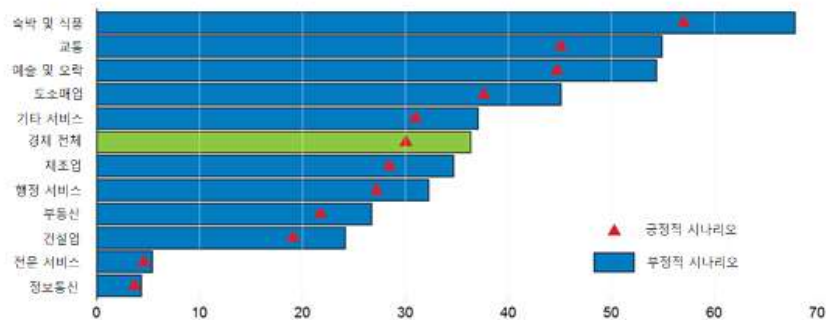


- 주: 1. 패널 A의 파란색 바는 긍정적 시나리오, 빨간색 바는 부정적 시나리오 하에서 레버리지 기준 중위 기업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의 %P 증가를 나타낸 것임.  
2. 패널 B의 초록색 바는 No COVID-19 시나리오, 파란색 바는 긍정적 시나리오, 빨간색 바는 부정적 시나리오 하에서 레버리지 기준 분위별 기업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나타낸 것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9.

[그림 II -7] 이자비용 충당 불가 생존 가능 기업 비율

(단위: %)



- 주: 빨간 삼각형은 긍정적 시나리오, 파란색 혹은 녹색의 바는 부정적 시나리오에서 생존 가능 기업이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비율을 나타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10.

○ 높은 수준의 부채와 채무 불이행 위험은 회복을 더디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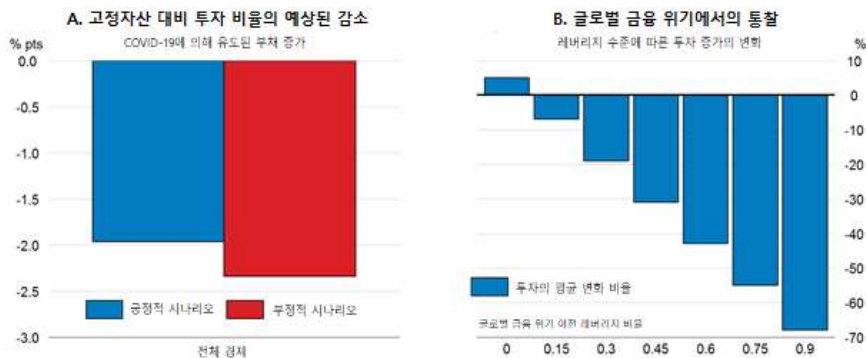
- 채무 수준과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면 “채무과잉(debt overhang)” 리스크에

폴리게 됨

- 리스크 하에 기업은 투자 능력 감소와 신규 신용 접근 제한으로 인해 비용 절감과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에 대한 규모를 줄임으로써 레버리지 상승 압력을 유발해 잠재 회복을 둔화시킴
-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1995~2018년 기간 부채와 투자 사이의 관계를 패널 분석한 결과,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고정자산 대비 투자비율이 시나리오에 따라 2~2.3%p 감소함
- 또한, 횡단면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있는 동안 높은 금융 레버리지 비율을 가진 기업은 더 큰 투자 감소를 경험했음
- 분석을 통해 2020년 초의 높은 부채 수준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의 부채 증가가 투자 및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음을 확인

[그림 II -8] 높은 금융 레버리지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단위: %p, %)



주: 1. 패널 A의 파란색 바는 긍정적 시나리오, 빨간색 바는 부정적 시나리오 하에서 중위 기업에 대한 고정자산 대비 투자 비율의 감소를 추정한 것임.

2. 패널 B는 금융 레버리지의 1 표준 편차 증가에 따른 고정자산 대비 투자의 평균 변화비율을 글로벌 금융 위기 전 레버리지 비율 기준으로 나타낸 것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11.

### ▣ 정책적으로 기업에 따른 개별적 지원이 필요함

#### ○ 공공금융을 활용하고 자기자본을 주입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자본 주입은 COVID-19로 인해 재정난을 겪지만 추후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생존 가능 기업의 미래 부채 증대 위험을 막고, 현금 조달에 도움이 됨
-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로서 공공금융은 미래 세금 형태로 파산의 위험을 완화하고, 기업의 회복을 모니터링하기 편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

음

- 실제로 미국과 독일은 각각 “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Soilfe Program”을 통해 미래 세금 형태의 공공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고,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국가는 자본비용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를 통해 자본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존 가능 기업의 채무 조정이 요구됨

-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존 가능 기업의 경우,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잠재적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금융에 대한 접근을 도모하고, 대기업에 대한 구조적 부채를 재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장기 회복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생존 불가능한 부실기업에 대한 청산이 보장되어야 함

- 기존 절차적 복잡성 때문에 청산이 어려운 부실기업의 장기 생존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청산 과정을 단순화 하고, 법적 자원의 재배치 혹은 전담 기관 설치를 통한 청산 과정의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변화: 추진요인과 남은 과제

■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는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변화가 생김

○ 통화 정책 프레임 워크는 통화 당국의 법적 환경을 정의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운영 지침을 제공함

-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는 지난 20년 동안 가격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운영 목표로 중기 2%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쓰임
- 하지만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검토하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은 존재하지 않음(캐나다는 5년마다 검토)
- 최근 경제 환경을 고려해 중앙 은행들이 통화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도록 공개 및 검토를 할 의향을 나타냄

<표 II -2> 일부 국가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목표	운용목표	도구	기자회견 및 회의록 발표	예측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물가안정, 완전고용, 적당한 장기 금리	PCE 기준 평균 2%인플레이션 목표	전통적 수단 QE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FOMC 회의에 따름(연 8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발표	이사회와 FOMC의 금리경로를 포함한 예측
유럽 중앙은행	물가안정	HICP 기준 중기 2%이하 인플레이션 목표	전통적 수단 QE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행정회의에 따름(6주 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팅에 대해 설명함	은행의 예측
영란은행	물가안정	headline CPI 기준 항시 2% 인플레이션 목표	전통적 수단 QE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MPC에 따름(연 8회) 영란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발표	은행과 MPC의 금리경로를 포함한 예측
일본은행	물가안정	CPI(신선식품을 제외한) 기준 오버슈팅을 고려한 "최대한 빠른 시간내의" 2% 인플레이션 목표	전통적 수단 QE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수익률곡선관리	MPM에 따름(연 8회) 일본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발표	정책 이사회의 예측
캐나다은행	물가안정	headline CPI 기준 중기 2% 인플레이션 목표 (오차 범위 1%)	전통적 수단 QE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정책 결정에 따름(연 8회) 캐나다은행은 기자회견을 개최하나 회의록 발표는 하지 않음	은행의 금리경로를 포함한 예측
스웨덴 중앙은행	물가안정	headline CPIF 기준 2년내 2% 인플레이션 목표(오차 범위 1%)	전통적 수단 QE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통화정책회의에 따름(연 5회)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발표	은행의 금리경로를 포함한 예측
스위스 국립은행	물가안정	headline CPI 기준 중기 0~2% 인플레이션 목표	전통적 수단 QE 외화개입	통화정책평가에 따름(분기별) 스위스 국립은행은 연 2회 기자회견을 열지만 회의록은 공개 안함	은행의 예측

주: PCE는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 CPI는 소비자물가지수, CPIF는 고정금리 하의 소비자물가지수, QE는 양적 완화,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MPC는 통화정책위원회, MPM은 통화정책회의를 뜻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Table 2.1.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통화 정책 프레임의 변화가 발생함

-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충격과 구조적 변화로 인해 생산성과 인플레이션의 감소를 겪었고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선(Zero Lower Bound)에 도달할 위험이 증가함
- 따라서 주요 중앙 은행들은 지난 10년간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검토를 함
- 이런 검토를 통해 양적완화와 같은 비(非) 전통적 통화 정책의 사용이 보편화 되었고, 2020년 8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새로운 성명서를 발표해 “뉴 노멀”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변화를 공식화함

■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변화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문제도 있음

○ 저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입함

- 지난 20년동안 선진국의 코어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 경기 회복을 위한 새로운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는 저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어 보이지만, 수요 공급 불균형, 정책 신뢰와 인플레이션 기대치 등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존재함

○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됨에 따라 중요한 정책 목표인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조절은 쉽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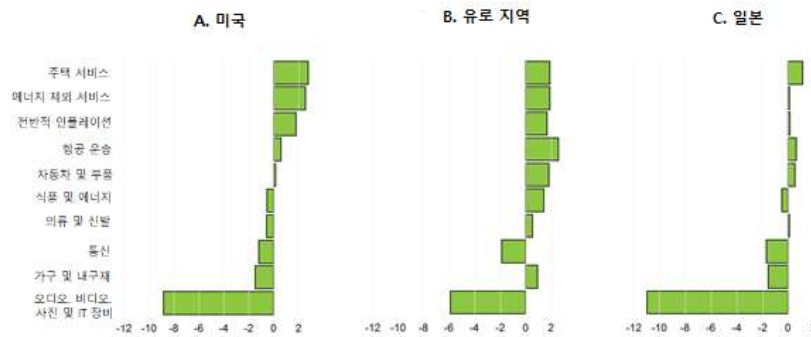
- 중앙은행의 모형에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생산갭(Output gap)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 실질 금리를 낮추고, 상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유도할 수 있음
- 금리가 제로 하한선에 가까우면 가격 인상이 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을 촉진해야 함
- 다만,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가계와 기업이 정책 목표 인플레이션이나 실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 모르는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외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이 있는 경우 정책의 효과는 줄어들음

○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금융 정책 프레임워크 변화의 효과는 줄어들 수 있음

- 지난 30년간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수요 구조와 관련된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일부 범주의 상품과 서비스에만 큰 가격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 통화정책 결정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함

[그림 II -9]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디플레이션

(단위: %)



주: 각 경제 별 2000년과 2020년의 1월~8월의 백분율 변화율로 지역별 카테고리 구성이 동일하지 않음 (유로 지역의 경우 식품과 에너지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가 인플레이션된 분야에 포함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13.

- 이런 변화를 만든 요인으로 세계화, 소매 및 네트워크 산업의 발전, 수요 약화와 대량 공급이 있음
- 이런 추세가 선진국에서 지속되면 중앙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군분투해야 하지만, COVID-19 위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보호주의 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4. 줄타기: 바이러스를 억누르고 봉쇄조치를 피하며

■ COVID-19의 확산에 대한 정책이 전염병 확산과 경제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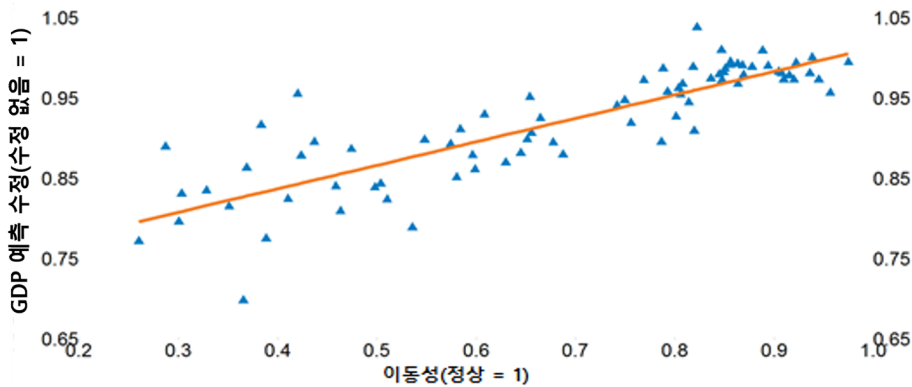
○ COVID-19의 재확산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질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첫 번째 대규모 확산 기간의 정부 정책이 바이러스 재생률인 R과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염병 확산과 경제

적 균형을 평가하고자 함

- 이동성은 경제활동과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진 계수로 경제 활동을 대체하는 변수로 사용되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위치기록을 데이터로 사용함
- 어떤 정책 개입 없이 거리두기와 같은 행동 제한의 경우 이동성을 10% 감소 시킴
- 전염병의 유효 전파율인 R은 감염환자 수 당 평균 2차 환자 수로 바이러스가 박멸되기 위해서는 R이 1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함
- 약 70개국의 중위 R값은 2월 3 정도에서 5월초 1 수준으로 떨어진 뒤 안정세를 보이나 유럽의 경우 주요 봉쇄 조치가 있기 전 10월에 R이 1.5에 근접하고 있음
- R에 대한 추정 방정식은 로그 형식이라는 것으로 R이 높은 초기의 정책개입이 R이 낮아진 후의 정책 개입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함

[그림 II -10] 이동성과 2020년 1,2 사분기 GDP 예측의 관계



주: 수직축은 2019년 12월 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해당 분기 GDP 추정치 혹은 실제 GDP에 대한 가장 최근의 GDP 추정치(혹은 실제 값)의 비율이고 각 삼각형은 OECD와 BRIICS 국가의 국가/분기 조합을 나타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14.

[그림 II -11] 중위 및 분위별 유효 재생산율(R)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17.

■ 각 정책이 R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추적과 검사를 포함한 건강 정책이 이루어져야 R을 1 이하로 줄일 수 있음

○ 봉쇄정책은 이동성 감소에 큰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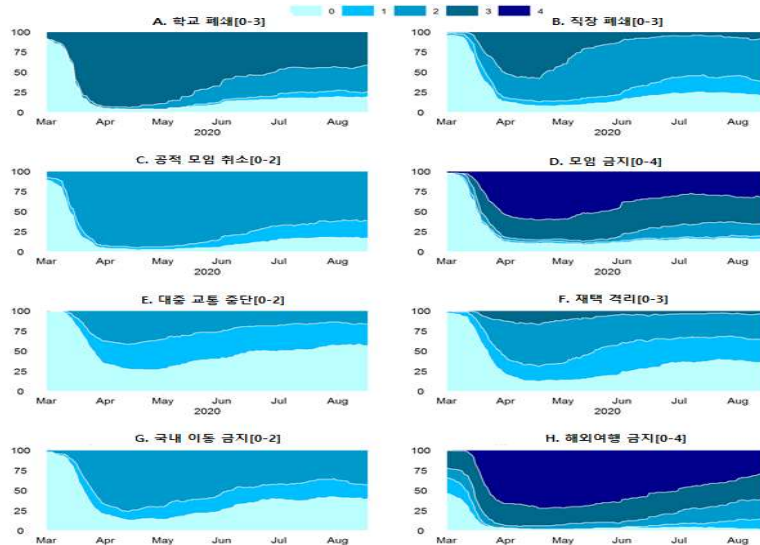
- 분석에 따르면 8가지 유형 중 7 종류의 봉쇄정책(모임 금지 제외)이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보이고 엄격성이 높을수록 이동성 감소 수준은 높아짐
- 봉쇄정책은 8가지 유형의 정책 분류에 따라 엄격성과 포괄성의 정도를 나타냄
- 봉쇄조치는 최대 엄격성 수준을 적용하기 전에 R의 감소가 최대가 된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의미를 가짐

<표 II -3> 봉쇄조치 엄격성 점수

봉쇄조치	엄격성 수준
학교 폐쇄	1 권고
	2 강제(일부 학교급 또는 범위)
	3 강제(전부)
직장 폐쇄	1 권고(혹은 재택 근무)
	2 일부 분야, 노동자 강제(혹은 재택 근무)
	3 필수 사업장 제외 강제(혹은 재택 근무)
공적 모임 취소	1 권고
	2 강제
모임 금지	1 1000인 이상 금지
	2 101인 이상 금지
	3 11인 이상 금지
	4 10인 이하 금지
대중 교통 중단	1 권고(혹은 일부 제한)
	2 강제(혹은 대부분의 시민 사용 제한)
재택 격리	1 권고
	2 운동, 식료품 구매, 필수 여행 제외 금지
	3 최소한(주1회, 1인한정 등) 제외 금지
국내 이동 금지	1 시, 지역 외 여행 금지 권고
	2 금지
해외여행 금지	1 심사
	2 고위험 지역에서 입국 시 격리
	3 일부 지역에서 입국 금지
	4 모든 지역 국경 폐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Table 2.3.

[그림 II -12] 봉쇄조치 엄격성 수준에 따른 국가별 적용 비율  
(단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2.15.

- 추적 및 검사 정책(공공보건정책)은 확산 초기에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책임

- 추적 및 검사 정책은 옥스퍼드 대학의 정책 지표를 사용해 정책의 포괄성 점수를 측정
-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추적 및 검사 정책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국가가 늘어났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음
- 분석에 따르면 가장 포괄적인 범위의 추적과 검사를 할 때 가장 제한된 형태보다 2.5배 효과적이지만 추적과 검사는 일일 감염 건수가 10건 미만인 확산 초기에 가장 효과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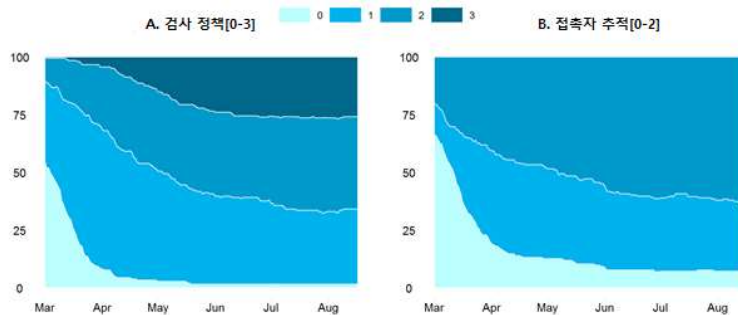
<표 II -4> 공공보건정책 엄격성 점수

어떤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0 검사 정책이 없음
1 증상이 있고 특정인인 경우(의료 종사자, 해외에서 귀국 등)
2 COVID-19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
3 모든 사람(드라이브스루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경우 등)
정부가 접촉자 추적을 하는지?
0 추적 하지 않음
1 제한된 추적
2 모든 인식된 경우 추적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Table2.4.

[그림 II -13] 공공보건정책 엄격성 수준에 따른  
국가별 적용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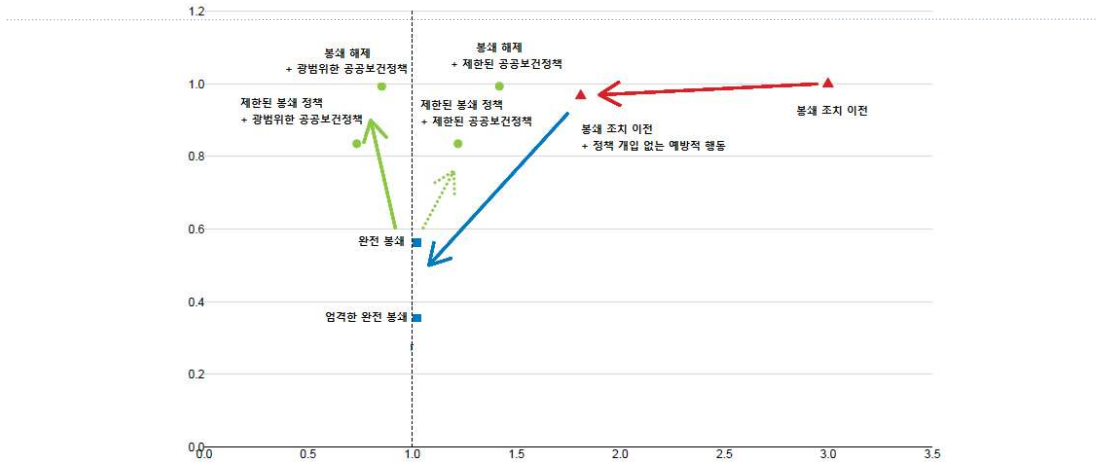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2.19.

■ 부수적인 조치도 R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임상 실험들을 통해 볼 때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에서 바이러스 보호에 효과가 있지만, 실외 착용 강제까지 정책 확장이 R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보고되지 않음

- 노인 보호 정책 조합은 개별 정책보다 큰 효과를 보임
  - 노인들을 집에 머무르도록 권고하거나, 요양원 방문을 제한하거나, 요양원 방문 혹은 거주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 등의 조치가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음
  - 이런 노인 보호 정책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함께 사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시나리오 분석 결과 봉쇄조치 해제 이후에는 광범위한 공공보건정책과 다양한 정책의 조합이 가장 이동성을 높이고 R을 감소시킴
  
-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는 광범위한 억제 조치 실행이 필수 적임
  - 시나리오 분석 상 발병 초기 제한된 공공보건정책과 완전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 이동성이 크게 감소하지만 R이 1에 가깝게 감소함
  - 3~4월 전형적으로 시행되었던 봉쇄 수준과 최대한 엄격한 봉쇄 정책 시행의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이동성은 전자의 경우 40%, 후자는 60% 이상 감소해 차이가 크지만 R 감소는 거의 차이가 없음
  
- 봉쇄 정책 해제 시 광범위한 공공보건정책과 다양한 부수 정책 적용이 가장 효과적임
  - 봉쇄 정책을 통해 R이 1 수준에 가까워진 후 제한된 봉쇄 정책과 완전 봉쇄 정책 해제를 비교하면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이동성에 크게 도움이 됨
  - 반면 제한된 공공보건정책과 광범위한 공공보건정책을 비교할 경우 제한된 공공보건정책은 다시 R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므로 바이러스 감소가 지속될 수 없음
  - 따라서 경기 회복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 해제 시 다양한 정책 조합이 요구됨

[그림 II -14] 정책에 따른 R과 이동성 수준 변화



주: 가로축은 R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이동성을 나타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Figure 2.20.

### Ⅲ. OECD 회원국과 비OECD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 1. 호주

- (COVID-19 현황 및 대응) 다른 국가에 비해 피해가 덜하지만, 6월 봉쇄 조치 완화 이후 재유행이 시작되어 빅토리아 주는 3개월 이상 주 전체 봉쇄조치를 재 시행함
  - 호주의 COVID-19관련 사망자 중 90%가 빅토리아 주에서 발생
  - 8월 초 정점을 찍은 후 신규 확진자수는 점차 감소했고, 주정부는 10월 중순에 봉쇄조치 완화에 착수함
- (경제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3.8%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2021년 3.2%, 2022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빅토리아 주의 두 번째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와 노동시장 회복세가 주 별로 차이를 보임
    - 빅토리아 주의 고용은 2020년 3월 수준보다 6% 낮은 반면, 노던 준 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취업자 수는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 광업, 제조업, 소매업은 크게 반등했지만, 예술, 휴양, 숙박 등 서비스 취약업종의 누적 실직률은 13~1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시적 급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일자리 보호 프로그램(JobKeeper program)은 100만명의 고용주와 전체 고용의 3분의 1을 지원
    - 일자리 보호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중단과 노동력 참여 증가가 실업율을 더욱 상승시킬 전망
  - 중국의 인프라 주도 경제회복이 상품 수출과 광업 투자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고조될 경우 수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
  -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0년 3분기 상품가격 상승과 보육료 면제 철폐에 따른

이월효과(carryover effects)에 의해 하락하다 서서히 상승할 전망

■ (재정정책) 지난 10월 GDP의 11.2%에 달하는 직접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긴 추가 재정완화 조치가 포함된 연방 예산을 발표

- 추가 재정완화 조치는 2020년 4분기와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고용보조금, 인프라투자, 사업세액 공제 등이 포함됨
- 공공지출은 민간부문의 회복세에 힘입어 2021년 하반기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중앙은행은 정책금리와 3년 만기 호주 국채 수익률 목표치를 0.1%로 낮추고, 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장기 저비용 자금 지원을 확대
  - 또한 장단기금리운영정책(yield curve control)의 일환으로 연방과 주 및 준 주에서 발행한 장기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

■ (정책제안) 경제 회복을 유지하고 노동 재배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핵심 우선 순위임

- 추가 정책은 경제회복을 유지하고 노동 재배치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함
  - 여러 주 정부가 고려 중인 인지세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의 토지세 전환은 성장 친화적인 조세 구성 및 노동 이동성을 촉진시킬 것임
  - 또한 기술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접대 및 레크레이션 서비스와 같은 부문에서 재취업 및 제조, 디지털 서비스로 노동력 재분배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 능력을 유지해야 함

<표 III-1> 호주 경제 및 재정전망

	2017/2018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8	1.8	-3.8	3.2	3.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9	1.6	0.7	1.6	1.6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5.3	5.2	6.8	7.9	7.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0.2	-0.2	-12.7	-6.5	-5.1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2</sup>	43.5	45.8	57.7	64.1	68.8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2.1	0.6	2.3	1.6	1.4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 오스트리아

- (COVID-19 현황 및 대응) COVID-19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처하자 11월 중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재개함
  - 11월 중순부터 전국적인 봉쇄조치가 재개되어 학교 폐쇄, 공공행사 개최 금지, 대부분의 상점 영업활동을 중단
    - 슈퍼마켓, 약국 및 기타 필수 사업체만 영업 가능하며, 식료품 구입 및 출퇴근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집에 머물러야 함
- (경제전망) GDP는 2020년 -8%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2022년 말까지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2021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에야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실업자 수는 4월 정점에서 15만 6,000명 가량 줄었으나 3월 이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됨
    - 다만, 단축근무 제도 시행 이후 등록자 수가 4월 중순 130만 명 이상이었던 것과 달리 9월에는 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등록되어 노동시장의 점진적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관광객 체류건수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 서비스 업종이 큰 영향을 받음
    - 봉쇄조치와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관광객 유입 제한이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 봉쇄 조치와 자발적 제지가 민간소비에 타격을 입히면서 생산량은 단기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음
    -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와 주요 교역국들의 완만한 성장은 수출과 투자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함
  - 백신 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2021~22년에 걸쳐 활동은 회복되겠지만 2022년 말에는 여전히 위기 이전 추세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여겨짐

- (재정정책) GDP의 약 10%에 달하는 지원 패키지(380억 유로) 및 6월 발표된 GDP의 약 13%에 이르는 추가 대책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하는데 도움이 됨
  - 신규 대책에는 2021년 3월까지 단축근로계획 연장, 기후보호와 디지털 교육에 대한 지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연구와 의료장비 지원, 세금 감면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이 포함됨
    - 특히 6월 지원된 프로그램에는 녹색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소득세 첫 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을 25%에서 20%로 소급인하하는 방안은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는 2020년 11월, 80만 유로를 한도로 예상 매출의 최대 80%를 사업자에게 환급하기 위해 30억 유로를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
- (정책제안) 자기자본 시장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기자본 시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어 기업부채의 증가를 피하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임
    - 따라서 기업지분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및 벤처 캐피털과 중소기업 대상의 민간투자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자기자본 제공과 인수를 장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표 III-2> 오스트리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sup>1</sup>	2.5	1.4	-8.0	1.4	2.3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1	1.5	1.3	1.3	1.6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4.8	4.5	5.6	5.6	5.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0.2	0.7	-10.5	-6.7	-2.6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4</sup>	74.1	70.6	86.8	91.9	92.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1.3	2.8	2.9	3.1	3.2

주: 1. based on seasonal and working-day adjusted quarterly data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4. percentage of GDP, Maastricht definit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3. 벨기에

- (COVID-19 현황 및 대응) 확진자수가 4월 절정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다시 급증하는 추세
  - 5월부터 집단행사 금지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였으나 10월부터 다시 광범위한 봉쇄 대책을 시행함
    - 재택근무, 10월 중순에 채택된 야간 통행금지, 11월 초순부터 6주간 비 필수 업종의 사업장 폐쇄 등이 포함됨
    - 입원환자수와 중환자실 점유율은 10월 말 올해 초 최고점을 넘어선 이후 감소하기 시작
  
- (경제전망) COVID-19에 강한 타격을 받아 GDP는 2020년에 -7.5%까지 위축된 후 서서히 회복될 예정
  - 신속하게 시행된 재정 정책은 경제활동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초기 봉쇄조치의 점진적 완화와 재봉쇄로 인해 부분적으로 고르지 못한 회복이 이어짐
    - 새로운 봉쇄 조치로 인해 11월 중순 민간 사업체의 매출액은 평년보다 17%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특히 내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숙박업종은 물론 예술·엔터테인먼트업종 등 오랜 기간 봉쇄조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업종이 크게 위축됨
  - 임시해고제도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2020년 4분기부터 실업률이 상승하여 임금과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임
    - 고용 감소는 실업급여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민간소비에 타격을 줄 것
  
- (재정정책) 2020년 초부터 직접 소득 지원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GDP의 3.9% 규모의 재정대책을 시행중

- 임시해고제도(temporary layoff scheme)와 자영업자 대체소득에 대한 긴급조치, 사업자 보상 등은 일자리와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됨
  - 임시해고제도를 이용한 기업에 대한 혜택은 2020년 말까지 유지되고, 봉쇄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을 제외한 신규 신청자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11월 초 봉쇄조치 강화에 따라 재도입됨
-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GDP의 10.7% 규모의 신규 대출과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에 대한 보증 제도를 도입
  -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벨기에 국립 은행의 정책 완화 등과 함께 총수요를 뒷받침함
- (정책제안) 최근 봉쇄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확실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이 계속되어야 함
  - 임시해고제도와 대출상환유예, 공적 보증제도 등의 엄격한 관리로 봉쇄조치로 피해를 본 사업자 이외에 비생존사업자에게 지원이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이는 벨기에의 국가채무가 이미 매우 높기 때문에 재정 균율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일부 일자리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기술향상과 재숙련을 위한 공공 고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표 III-3> 벨기에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8	1.7	-7.5	4.7	2.7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3	1.2	0.5	0.7	0.6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6.0	5.4	5.7	7.9	6.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0.8	-1.9	-11.3	-8.1	-4.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99.8	98.1	116.3	118.7	120.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0.8	0.3	-1.1	-0.3	0.0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of GDP, Maastricht definit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4. 브라질

- (COVID-19 현황 및 대응) 2월 말 첫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확진자의 빠른 증가로 인해 브라질 국민의 3분의 2가 의존하고 있는 공공 보건 체계가 심각한 부족에 직면
    - 중환자실 입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
  - 중앙정부 수준의 강제 봉쇄조치가 시행되지 않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3월 말부터 7월까지 학교, 상점 및 해변 폐쇄, 공공행사 취소, 육로 및 해상 국경의 폐쇄 조치가 이루어짐
      -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어 2020학년도에는 아예 재개교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경제전망) 신규 확진자 수와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회복되기 시작함
  - 주요 단기 활동 지표들은 현재 상당히 견고하고 광범위한 회복을 가리키고 있음
    - 심지어 관광, 엔터테인먼트, 호텔, 레스토랑, 개인 서비스 등 유행병의 영향을 받는 분야를 포함하는 서비스 부문도 눈에 띄게 개선됨
    - 소비자와 기업 모두 신뢰도가 반등하여 대유행의 발생 이후 신용도가 눈에 띄게 높아짐
    - 그러나 고용 감소, 근로시간 단축,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가능성은 여전히 노동소득과 민간소비를 압박하고 있음
  - 수출은 식품과 광물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회복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
  - 실업률은 2021년에 거의 14%로 최고조에 달한 뒤,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는 가운데 서서히 낮아질 전망
- (재정정책) 재정대책 규모가 GDP의 8%를 넘어섰고 비공식부문 근로자 등 취약가구에 대한 중점 지원이 이루어짐

- 긴급 지원조치로서 지난 4월부터 비공식부문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6,7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 120달러(최저임금의 57%)를 지급
  -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신용대출 한도 증액, 확진자의 2주간 유급 병가비용 지급, 이연법인세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함
  -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위한 직접 지출의 규모가 GDP 대비 2% 가량 증가
  - COVID-19는 총 국가 채무 비율에 20%p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말 GDP의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정책제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은 회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국내 규제 개선과 세계 경제와의 긴밀한 통합은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사회적 보호는 기존의 현금 이전 계획을 기반으로 구축함으로써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음
    - 참여 문턱과 복리후생 수준이 높아지고, 신규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해 공식 일자리의 비임금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공식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COVID-19 외에도 개혁의 지연은 성장 및 재정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작용할 것

<표 III-4> 브라질 경제 및 재정전망

	2000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2	1.1	-6.0	2.6	2.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3.7	3.7	2.7	2.5	3.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1</sup>	-7.1	-5.9	-16.9	-7.6	-6.7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1</sup>	-2.2	-2.7	-1.2	-1.1	-1.0

주: 1.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5. 캐나다

- (COVID-19 현황 및 대응) COVID-19의 제2차 확산에서 기록된 일일 환자수는 1차 확산의 환자수를 뛰어넘었지만, 사망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임
  - 다만 캐나다는 인구의 약 17%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위험 인구 집단이며, COVID-19 관련 사망자의 약 90%가 70세 이상 노인임
  - 최근 각 주 별로 상점, 기업, 식당 등이 폐쇄되고 필수 사업장의 실내 인원 규모 50% 제한, 사교 모임 관련 실내모임 금지와 실외 모임 제한 조치가 시행중
- (경제전망) 2020년 GDP는 -5.4%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에는 3.5%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은 5월 봉쇄 해제 이후 빠른 회복을 보임
    - 소매업과 도매업을 포함한 일부 부문의 활동은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하지만 생산과 고용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일부 업종에서는 수요가 약하며 소비심리가 위축될 조짐도 보이고 있음
    - 또한 온라인 소매업으로의 전환 가속화(봉쇄 기간 중 전자상거래 매출 약 2배 증가)와 같이 COVID-19에 의해 촉발된 구조적 변화는 조정 비용을 야기함
    - 캐나다은행의 기업전망조사 결과, 3분기 기업 심리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남
- (재정정책) 2020~21년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총 지출액은 GDP의 11%로 추산됨
  - 근로소득 손실이 발생한 근로자를 위한 비상지원금(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은 9월 말 종료됨
    - 하지만 CERB의 종료는 지원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수혜자들이 실업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특정 그룹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이 도입됨
  - 고용주를 위한 긴급임금지원(Canadian Emergency Wage Subsidy, CEWS)은 연장

- 최대 3개월 동안 고용주에게 최대 75%의 임금 보조금을 제공하는 CEWS는 800억 캐나다달러(GDP의 약 3%)의 지출이 예상되며 2021년 중반까지 연장
  - 사업체 임대지원, 신용지원, 대출보증 등도 2021년까지 확대될 예정
  -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액과 비교하면 미미하지만, 안전망에 대한 특별 조항과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유지
  - 세수가 회복되고 가계와 기업 지원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2021년과 2022년에는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채무비율은 늘어날 전망
  - 캐나다은행의 지방 정부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정책금리 0.25%의 초저금리를 유지 중임
- (정책제안) 사업 부문의 회복 촉진,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육성이 핵심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
- 사업 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오랫동안 저해해온 구조적 문제 (예: 주 및 준주 간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를 해결해야 함
  -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 대응성, 실효성을 개선 해야 함
    - CERB 종료 후속조치는 자영업자 지원 등 일부 격차를 해소하긴 하지만, 보편적 안전망·복지 지원이라는 이슈는 여전히 존재함

<표 III-5> 캐나다 경제 및 재정전망

	2012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0	1.7	-5.4	3.5	2.0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2	2.0	0.6	0.7	1.2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5.8	5.7	9.6	8.7	7.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0.4	-0.3	-15.6	-11.3	-5.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2</sup>	93.8	94.3	121.5	131.2	135.4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2.5	-2.0	-1.9	-1.7	-1.7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6. 칠레

- (COVID-19 현황 및 대응) 칠레는 인구 백만명 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COVID-19의 큰 피해국 중 하나임
  - 수도인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대도시지역에 집중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 이동 제한 및 야간 통행 금지가 적용됨
  - 산티아고시와 다른 대도시는 5월에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감염이 감소하기 시작한 7월 중순에 대부분의 봉쇄 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
    - 3월에 선언된 비상 상태는 연말까지 연장
- (경제전망) 2022년 말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말 사회적 시위 이후, COVID-19 발생은 경제를 1982년 이후 가장 깊은 불황으로 빠트림
    - 거의 25%의 노동력이 일자리를 잃어 고용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
    - 약 10%의 기업(근로자수 기준 약 17%)이 고용 유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무역시장 둔화로 식품 및 원자재 수출량이 크게 감소함
    - 철강 분야의 가격 하락세는 생산량 감소 및 무역 흑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
  - 7월 이후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단기 지표들은 경제활동, 특히 소매판매와 제조업 생산량이 회복되기 시작한 반면, 관광과 서비스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음
  -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소비심리도 최근 살아나고 있으나 수요의 강한 위축으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음
  -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수요 회복에 수출이 탄력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정책) 충분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과 4

월 두 차례에 걸쳐 GDP 대비 6.7%의 대규모 재정 패키지가 통과됨

- 통화정책 기조는 역대 최저의 정책 금리와 파격적인 조치로 금융 안정성과 신용 확대를 모두 보장하는 등 높은 확장성을 지님
  - 재정대응은 남미국가 최대 규모였으며, 비공식 및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위한 현금이동, 일자리 유지 계획, 세금 감면, 기업을 돕기 위한 유동성 보증 조치 등이 이루어짐
    - 향후 2년간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비상 계획으로 고용보조금, 저소득가구 지원 대책, 공공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정당 간 합의 됨
  -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어 현재의 일시적인 재정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면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제안) 구조개혁 아젠다를 이어가는 것이 포용적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 될 것임
- 생산성 성장의 오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지출을 늘려야 하며, 기업의 경쟁과 혁신 성장을 이끌어야 함
  - 또한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현행 법안은 자본의 재분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표 III-6> 칠레 경제 및 재정전망

	2013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4.0	1.0	-6.0	4.2	3.0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4	2.6	2.9	2.6	3.0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7.4	7.2	10.8	9.8	8.7
중앙정부재정수지(cent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1.6	-2.8	-8.7	-4.7	-3.8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3.6	-3.9	0.3	-0.2	-0.7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7. 중국

- (COVID-19 현황 및 대응) COVID-19 환자가 산발적으로 다시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검증된 추적, 테스트, 격리 시스템에 의해 대부분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OVID-19의 대유행은 전국 대부분에서 통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무증상 보균자 및 해외 귀국자들 때문에 검역과 그에 따른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경제전망) 2020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사상 최대 성장률 급감과 3분기 안정화에 이어 2021년 약 8%, 2022년 4.9%의 성장세를 보이며 과거 궤도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
  - 초가을을 기점으로 거의 모든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COVID-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음(계절조정 시계열 기준)
    - 금융 및 IT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전세계 COVID-19관련 대책으로 관광서비스 및 숙박 시설 부가가치는 감소하고 있음
    - 다만 고용 회복이 더딘 데다 1분기 도시지역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낮아지면서 소비가 뒤처지고 있음
  - 인프라 투자의 상승은 2020년 성장을 견인 중임
    - 부동산 투자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마스크 등 COVID-19 관련 소재 및 장비 수요는 물론 재택근무 관련 상품에 힘입어 호황을 누림
    - 명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박스오피스 수입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도 고용 회복이 미흡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소비 회복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함
      - 더욱 강력한 고용창출과 도시 가계 소득 감소의 반전, 사회보장 강화 없이는 소비의 완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수출 주도 기업이 전체 고용의 1/4를 차지하기 때문에 장기간 무역 갈등은 글로벌 무역과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회복을 위해 꾸준히 지원 중임
  - 금융통화정책은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경기를 부양했지만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으면서 오히려 중립적으로 돌아섰고, 기준금리는 반년 넘게 동결됨
    - 이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자극을 피하기 위한 필요조치임
  - 주로 국영 기업의 기업 부채는 2020년 1분기에 10%p나 급증하여 회복이 안정세에 도달하면 디레버리징이 필요함
  - 특별 국고채뿐만 아니라 일반 지방채를 통한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COVID-19 관련 지출의 부담과 여름철 홍수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보건, 교육, 사회적 지원 등 중요 공공재 지출 축소를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짐
  - 특히 교외철도와 같은 특정 유형의 기반시설에 대한 물리적 투자는 포괄적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교육, 보건, 사회보장에 대한 소프트 투자도 강화되어야 함
- (정책제안) COVID-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 COVID-19 위기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사회 보호를 강화하여 예방적 저축을 줄이며 소비자 지출을 장려하는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민간 부문은 투자 기회 확대와 민간 투자 비중 축소를 되돌릴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야 함

<표 III-7> 중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6.7	6.1	1.8	8.0	4.9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9	2.9	2.8	2.3	2.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1</sup>	-3.0	-3.7	-6.9	-6.2	-5.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1</sup>	0.2	1.0	2.5	3.5	3.5

주: 1.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8. 덴마크

### ■ (COVID-19 현황 및 대응)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경미한 수준

- 환자 입원은 수용 한도 이하였으며 총 사망률 또한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음
- 늦여름부터 COVID-19가 재확산 하기 시작해 점차 봉쇄 조치를 강화
  - 11월에 공개모임이 10명으로 제한됐고,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북서부 7개 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봉쇄에 들어감
  - 식당과 술집은 밤 10시에 문을 닫고, 재택근무가 장려됨
  - COVID-19의 급속한 확산과 돌연변이에 대한 공포로 인해 밉크 농장에서 전국의 모든 밉크들이 도살됨

### ■ (경제전망) 2020년에 전년대비 약 -4% 감소한 뒤 2021년에 약 2%, 2022년에 2.5%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됨

- 경제활동은 초여름에 재개되어, 신용카드 거래를 바탕으로 한 이동성 데이터와 소비량은 2019년 6월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여행 제한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었고, 물가와 부동산 매물이 유행 전 수준을 웃돌면서 주택 시장이 반등함
- COVID-19의 2차 확산은 단기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음
  - 2021년 후반에 백신이 보편적으로 보급될 때까지 국지적 바이러스 발생에 대처해야하기 때문에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
  - 고용 유지 제도가 가계 소득을 보호하고 민간 소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회복 속도는 국제 무역의 회복에 크게 좌우될 것임

### ■ (재정정책) 내년 예산은 GDP의 약 1%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음

- 정부는 봉쇄기간 동안 기업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한에서 고정비용 및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실업혜택 기간 연장, 신용보증 대출 지원을 시행

- 8월 말까지 강제 휴업에 들어간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최고 8% 이상의 근로자를 보호
- 또한 직원들의 휴일 급여 제도를 개혁하여 특별 의무 연금 저축을 실시함으로써 10월에 가계 총 소득을 GDP의 2.6%까지 끌어올림

■ (정책제안) 꾸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함

- 특히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구조개혁과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환경 보호 활동과 같은 분야로 수요가 감소하는 일부 서비스에서 필요한 자원 재분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표 III-8> 덴마크 경제 및 재정전망

	2010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2	2.8	-3.9	1.8	2.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0.8	0.8	0.4	0.7	0.9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5.1	5.0	5.7	6.2	5.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0.7	3.8	-3.9	-2.9	-1.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34.0	33.3	44.1	40.1	40.9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7.0	8.9	7.6	6.8	7.1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of GDP, Maastricht definit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9. 유로 지역

- (COVID-19 대응) 5월부터 7월까지 현저한 역학적 개선 후, COVID-19 감염은 유럽 전역에서 다시 불붙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전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통행금지나 술집·식당 폐쇄 등 개인적 상호작용을 줄이기 위한 표적 봉쇄조치의 도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 봉쇄를 재시행
    - 유럽연합은 국가 간 여행 제한에 따라 국가나 지역의 역학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 자유 이동 제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
- (경제전망) 2020년 GDP가 -7.5%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3.5%와 3.2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 말에야 다시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봉쇄 조치가 끝난 후 강한 반등이 있었지만, 2차 확산으로 인해 회복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짐
    - 봉쇄 조치가 끝난 후 소매 판매는 부분적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전의 수준을 따라잡았으나, 산업생산 회복은 투자 약세로 인해 불완전한 상태임
    - 또한 여행이나 직접적인 대면서비스에 의존하거나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가을의 2차 확산과 봉쇄 조치 등으로 활동이 제한되면서 경제 활동이 다시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량 감소 규모는 2분기보다는 적을 전망
  - 실업률은 2021년 중반까지 상승해 두 자릿수에 육박하다가 이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대유행의 영향은 유로지역 전체에 걸쳐 불균등하게 적용되어 결국 국가 간 격차가 잠재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정책)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에 대한 합의를 통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이 있을 예정

- ECB는 지난 3~6월 잇따른 정책 발표에 이어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대규모 자산 매입을 지속하는 한편, 필요시 지원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함
  -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의 감소와 부정적 경제 전망에 따라 ECB 정책 금리는 향후 2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 됨
- 유럽 이사회는 차세대 EU에 대한 합의를 통해, 주로 대출(3,600억 유로)과 회원국들에 대한 보조금(약 3,800억 유로)의 형태로 총 7,500억 유로(2019 GDP의 약 5.5%)의 자금조달을 구상하고 있음
- 국가 재정 정책은 2021년 말까지 SGP 제약을 일시적으로 해제함으로써 활동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
- 재정 지원과 위축된 경제 활동은 국가채무를 GDP의 100% 이상으로 유지시킬 것으로 보임
- 2021년에는 중립적인 재정기조가 예상되고 2022년에는 예산 통합이 뒤따를 전망

■ (정책제안) 자원 재배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국가 재정 정책은 총 수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기 예산 통합을 피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차세대 EU 보조금 수령이 늦어질 수 있는 절차상 문제와 관계없이 회복 및 복원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 EU 차원에서도 금융 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sup>7)</sup>을 줄이면 탄력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임

7) 유로존 내 중심국가와 주변국 간 구조적 차이로 조달 비용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금융 통합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칭함

<표 III-9> 유로지역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9	1.3	-7.5	3.6	3.3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8	1.2	0.3	0.7	1.0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8.2	7.5	8.1	9.5	9.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0.5	-0.6	-8.6	-6.5	-4.1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87.7	85.9	101.8	104.5	105.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3.5	3.1	3.0	3.4	3.5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of GDP, Maastricht definit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10. 핀란드

- (COVID-19 현황 및 대응) 제 1차 유행은 유럽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제 2차 확산이 시작됨
  - 입원 건수는 다시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1차 유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집과 식당 등에 대한 인원 제한과 시간 제한을 강화하였고, 입국 제한도 강화
  
- (경제전망) 회복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임
  - GDP는 2020년에 -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에는 1.5%, 2022년에는 1.75%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숙박, 관광 및 식음료 서비스 활동이 특히 감소하였으나, 2분기 실질 GDP는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적은 4.5% 감소
    - 9월에는 실업률이 7.6%로 전년대비 1.7%p 상승
    - 여름부터 경기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교역국들의 제 2차 확산에 의해 초기 반등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실업률은 일시적 해고가 많아지면서 2021년에 정점을 찍고, 2022년에는 7.75%로 서서히 낮아질 전망이다
  
- (재정정책)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 가계와 사업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실행 중
  - 임시해고 제도를 통해 영구적인 정리해고에 대비하고 실업 수당의 지급 범위를 넓힘으로써 기업 파산을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함
    - 실업급여 수급 전 대기기간이 없어지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기업인과 자영업자로 확대
  - 중소기업과 항공·해상운송, 음식점, 카페 등 하드 히트 업종에 대한 지원 병행

- 기업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한시적으로 완화시킴
- 이러한 위기 대응 정책의 영향으로 구조적 예산 적자가 2020년 GDP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추정
  -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경우 2021년과 2022년에는 구조적 적자가 GDP 대비 각각 1.7%,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정책제안) 회복이 늦어질 경우 재정 부양책을 확대하고 한시적 소득 지원책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소득관련 실업 수당 보장 확대를 위해 무보험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본 실업보험기금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표 III-10> 핀란드 경제 및 재정전망

	2010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5	1.1	-4.0	1.5	1.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2	1.1	0.5	1.0	1.4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7.4	6.7	7.9	8.3	7.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0.9	-1.0	-7.5	-5.1	-3.7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59.6	59.3	63.8	68.5	72.3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1.7	-0.2	-0.3	-0.3	0.0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of GDP, Maastricht definit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11. 프랑스

- (COVID-19 현황 및 대응) 첫 번째 전국 봉쇄로 현저한 감소세가 보였으나, 확진자와 집중 치료 대상자 수는 7월 중순에서 11월 초 사이에 크게 증가, 두 번째 봉쇄 이후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추정
  - 실내공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현재 대부분의 프랑스 지역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 10월 중순에 고위험 수도권의 비필수적 활동과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통행금지를 적용했고 2주 후에 두 번째 전국 봉쇄 조치를 실시
    - COVID-19 감염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당국은 점진적인 봉쇄 완화를 발표했고 대부분의 상점들이 11월 말에 재개장 함
- (경제전망) 2020년 -9.1% 이후 2021년 6%, 2022년 3.3%까지 확대되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갑작스러운 초기 경제 중단 이후, 대부분의 제조업은 물론 상품소비, 건설업종, 비시장부문, 첨단 서비스업 등이 5~6월 모두 빠르게 회복됨
    -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10월 경제활동은 지난 4월 31% 감소에서 2019년 말 대비 4% 낮은 수준으로 반등
    - 하지만 11월 들어 관광·숙박·교통 서비스 수요가 계속 억제되었고, 봉쇄 재개로 인해 이들 부문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2019년 말 수준보다 13% 낮은 것으로 추산
  - 2020년 3분기 실업률은 9%로 상승하였으며, 청년층과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률 또한 영향을 받음
  - 예산 적자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GDP의 120%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재정정책)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강화된 단축 근로 제도 도입과 지원을 통해 2020년 예산 편성은 GDP의 약 3.9%에 달할 것

- 또한 2021년 GDP의 1.6%, 2022년 1.1%에 이르는 재정대책을 담은 1,000억 유로 규모의 중기 회복 계획인 프랑스 릴런스(France Relance)도 발표됨
  - 100억 유로의 사업세 감면, 고용 및 자동차 보조금, 공공 투자 확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자금 조달은 향후 2년간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
  - 재난 비상 조치와 이미 계획된 주택 및 기업소득세 인하, 그리고 보건 분야에 대한 자금조달도 COVID-19가 가계소득과 사업수익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확대된 자산매입은 총 수요를 계속 지원할 것
  - 차세대 EU 계획은 프랑스(보조금 400억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와 주요 교역국들의 2021~22년 재정조치에 도움을 줘 국내외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제안) 보건의료 및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

-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검진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격리 조치 확충을 모색해야 함
- 정부 대출 보증을 통해 기업 총부채가 급증하고 실업과 파산도 증가할 예정인 만큼 위기 여파로 인한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허용하는 것도 핵심 과제

<표 III-11> 프랑스 경제 및 재정전망

	2014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8	1.5	-9.1	6.0	3.3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1	1.3	0.5	0.4	0.8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2</sup>	9.0	8.4	8.4	10.5	10.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2.3	-3.0	-9.5	-7.4	-5.6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4</sup>	98.0	98.1	115.7	116.8	118.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0.6	-0.7	-2.4	-1.9	-1.4

주: 1. national unemployment rate, includes overseas departments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4. percentage of GDP, Maastricht definit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12. 독일

- (COVID-19 현황 및 대응)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10월 초부터 발생하여 11월 2일부터 새로운 봉쇄 조치 시작
  - 추적 및 격리 시스템이 지난 5개월 동안 지역 발생을 억제했지만, 10월 말에 이르러서는 확진자의 75%가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식당, 술집, 유흥업소, 공공휴양 시설을 폐쇄하였으며, 호텔에서의 관광객 숙박이 금지되고 모임도 제한됨
    - 12월 31일까지 대규모 공공 행사 취소, 상점 및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유럽 연합 및 셴겐 지역 내 고위험 지역으로의 여행 제한 및 검역 요건 강화 등이 조치됨
- (경제전망) 경제성장률은 2021년 2.8%, 2022년 3.3%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분기별 국민계정시산이 시작된 이래 GDP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뒤, 서비스 및 제조업의 주도로 반등이 이어짐
    - 사업 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 활동이 지속되었고 공공 투자는 확대됨
    - 지난 2~4월 주요 교역국들의 피해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었으며, 5월부터 크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수출가치는 1년 전보다 10% 하락했고, 자동차 제조 등 주요 자본재 수출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보다 15% 정도 낮은 수준
  - 실업률은 2020년 상반기(1~6월)에 비해 1.4%p 증가하였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단시간 근로에 대한 광범위한 채택으로 증가세가 완화됨
    - 9월 현재 호텔업, 금속, 기계공학, 차량건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단기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소매업, 건설업, 금융업은 10% 미만)
    - 단시간 근로에 대한 직원 재흡수로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2021년 상반기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정책) 공공부채 브레이크 예외조항이 발동됨에 따라 2020년 3월과 6

월 각각 1,560억 유로(GDP의 4.5%)와 618억 유로(GDP의 1.8%)의 추정 예산을 활용한 정책 발표

- 첫 번째 정책은 보건 지출을 통한 건강, 일자리 및 기업 보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 지급, 사회적 혜택, 단기 근로에 대한 접근 확대, 대출 보증 및 세금 유예 등에 중점을 둠
  - 두 번째 정책은 소비 진작 방안, 특히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자영업자를 위한 후속 자금, 그리고 디지털화, 교육, 보건, 대중 교통 및 녹색 에너지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11월 봉쇄 조치 강화에 따라 약 100억 유로(GDP의 0.3%)의 추가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2021년에는 수요 위축에 대응하여 비슷한 규모의 추가 지출과 이전이 점쳐지고 있음
    - 연방정부의 2021년 예산안 초안에는 순차입금 962억 유로(GDP의 2.8%)가 포함되어 있음
- (정책제안) 강력한 재정지원이 2020년 일자리와 기업을 보호했지만 재정통합 속도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21년과 2022년(GDP의 2% 미만) 재량적 재정지원이 조기 철회되면 회복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통합의 범위는 2020년에 GDP의 4.25%로 추산되는 지원 규모에 따라 좌우될 것임

<표 III-12>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3	0.6	-5.5	2.8	3.3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9	1.4	0.4	1.1	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3.4	3.1	4.2	4.8	4.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1.8	1.5	-6.3	-4.4	-1.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2</sup>	61.7	59.5	73.9	76.2	75.8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7.5	7.2	7.0	7.2	7.1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of GDP, Maastricht definit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13. 그리스

- (COVID-19 현황 및 대응) 강력한 정책 대응으로 1차 확산은 크지 않았으며, 늦어짐부터 감염 및 사망자가 증가하였으나 EU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2차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는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고, 전국적인 이동 제한과 학교와 탁아소는 물론 신체 접촉이 높은 사업장을 폐쇄함
  -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추적, 격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시스템 전체에 걸쳐 시설을 늘리고 있음
- (경제전망) COVID-19의 충격으로 2020년 GDP는 -10%로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2021년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임
- 5, 6월 봉쇄 해제 후 국내 소비자 및 서비스 활동이 반등하였으나, 봉쇄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광객 감소가 수요, 이직, 고용 및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침
  - 2020년 3분기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이는 내수 감소로 이어져 산업과 무역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됨
  - 지원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는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또한 늘어나고 있음
- COVID-19 위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그리스와 주요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회복은 2021년 후반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 백신이 보급되어 서비스업 회복이 촉진되고 소득과 고용, 수출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2022년 초부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 국가채무는 2020년 GDP의 214%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정책) 가계 소득 지원과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215억 유로 (2019년 GDP의 11%)의 예산을 편성
- COVID-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이연법인세, 사회보장금 감면, 일부 부가세 인하, 대출 지원으로 기업 유동성을 뒷받침함
- 14억 유로 규모의 일회성 소급 연금 지급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
- 2021년 예산안에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 인하가 우선시되어 장기적으로

고용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근로자 소득 지원을 위해 27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
- 또한 67억 5,000만 유로의 공공투자예산을 활용하여(차세대 EU 지원금 26억 유로 포함) 2019년 투자비 지출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
  - 투자 우선순위는 교육 및 보건 분야의 노동 및 사회포용 정책, 녹색 및 디지털 프로젝트,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임

■ (정책제안) 소득 지원 및 기술 업그레이드,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강화해 나아가야 함

- 은행의 부실채권 처분을 가속화하고 이연 세액공제를 처리하기 위한 ‘헤라클레스 제도(Hercules scheme)’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심각한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부실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교육 및 전문 트레이닝을 통해 구직자들이 COVID-19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생산성 성장을 강화해야 함

<표 III-13> 그리스 경제 및 재정전망

	2010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6	1.9	-10.1	0.9	6.6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0.8	0.5	-1.2	-0.2	0.8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19.3	17.3	16.9	17.8	17.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3</sup>	1.0	1.5	-9.4	-7.0	-2.6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4</sup>	186.2	180.5	213.7	207.6	194.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5</sup>	-2.9	-1.5	-5.2	-5.7	-2.7

-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National Accounts basis  
 3. percentage of GDP  
 4. percentage of GDP, Maastricht definition  
 5. On settlement basi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14. 인도

- (COVID-19 현황 및 대응) 빠르고 강력한 봉쇄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어, 사망자 수는 세계 3위를 기록한 반면, 사망률은 대부분의 심각한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임
  - 6월 1일에 봉쇄 해제가 시작되어 총 5단계로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신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9월 상반기에 가장 높았고 이후 급격히 감소
    - 현재 시행 중인 Unlock 5.0 단계에서는 완전 봉쇄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 준수 하에 학교(온라인 교육 권장), 일부 레크리에이션 활동(실내 수영장, 영화관 등) 및 예배 등 나머지 주요 제한사항이 가능해짐
- (경제전망) 2020~21 회계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이전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학교 폐쇄 장기화 및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의존 등에 따른 불평등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낙인효과(scarring effects) 및 도시 빈곤 악화로 인해 결국 성장 추세의 영구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인플레이션 또한 낙관적이지 못함
    - 파산 및 COVID-19 이후 활동을 재개하지 못한 비공식 부문의 생산자들에 의한 일부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지속되면 빠른 반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예상보다 빨리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출시되어 그에 따른 글로벌 성장의 고조가 동반될 때 국내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3~4월 금융시장이 매우 활기를 띠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2분기 GDP의 3.9%로 증가함
- (재정정책) 3차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봉쇄 조치와 소득 충격의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함

- 인도중앙은행은 정책 레포금리(policy repo rate)를 5.15%에서 4%로 인하하고, 신용상환유예 의무화와 일회성 채무재조정을 도입함
- 초기 재정지원은 GDP의 6.9%에 달했고(이 중 4.9%는 기업지원과 신용증진을 위한 예산외 조치), 추가로 가계 소비에 초점을 맞춘 GDP의 0.2%에 달하는 재정지원과 11월 GDP의 약 1.4%에 이르는 3차 지원이 이루어짐
  - 특히 경직된 정규 노동시장을 자유화하고 농업과 기업농업(agribusiness) 간의 시너지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구조 개혁도 이루어짐
  - GDP의 16%에 달하는 재정적자 및 세금 감면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 확충 여력이 거의 없어 2021~22 회계년도 예산안은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며 회계년도 개시를 전후해 정책금리 추가 인하가 예고되고 있음
- (정책제안)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재정 조치와 실행할 수 있는 중기 통합 계획 필요
- COVID-19 위기는 특히 미숙련자, 여성, 아동, 이민자, 장애인 등 빈곤층이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극명히 드러냄
  - 이에 따라,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주 경계를 넘어 식량 및 현금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에너지 및 비료 보조금 등의 개혁을 통해 빈곤층 대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함
- 관세 인하 및 단순화,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포함한 추가 무역 및 외국인 투자 개방은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임

<표 III-14> 인도 경제 및 재정전망

	2011/2012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6.1	4.2	-9.9	7.9	4.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3.4	4.8	5.9	4.6	4.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3</sup>	-6.2	-6.1	-8.3	-6.7	-6.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2.1	-0.8	0.9	0.5	-0.4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3. Gross fiscal balance for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15. 인도네시아

- (COVID-19 현황 및 대응) 인도네시아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인구 비중을 고려해도 적은 편이지만, 검사수가 G20 국가 중 가장 낮기 때문에 데이터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지난 6월 대규모 봉쇄 조치가 완화되었으나 확진자 증가로 인한 병상가동률 증가 및 인공호흡기 점유율로 인해 9월 자카르타에 봉쇄조치가 재도입됨
- (경제전망) COVID-19 사태로 인해 2020년 상반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COVID-19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도가 낮게 유지되면서 2021년에는 성장률이 추세를 밀들다가 2022년에는 5%까지 회복될 전망
    - 2021~22년에는 억눌린 수요가 충족되면서 소비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GDP 수준은 COVID-19 이전 추세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동북아 주요 시장이 회복되고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면서 교역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 수출 회복 예상은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
    - 상품 수출은 9월에 회복되다 10월에 다시 감소하였으며, 10월 수입은 1년 전보다 27% 가까이 감소해 1~10월 무역수지가 170억 달러(2019년 20억 달러 적자) 흑자로 나타남
    - 서비스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 등의 급격한 감소로 경상수지는 2019년 2.7% 적자인데 반해 2020년 3분기에는 GDP 대비 0.4% 흑자를 기록
  - 인플레이션은 2022년까지 중앙은행 목표의 중간 범위인 3%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적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정책) GDP 대비 3%로 설정된 재정적자 상한 규정 적용이 일시 중단

되었으며, GDP의 약 2.5%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시행

- 당초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부 지원은 빈곤층에 대한 현물 및 현금 이전, 노동자 및 기업에 대한 비과세 및 리베이트, 신규 대출에 대한 주 재정 보증(state financial guarantees), 국영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 등으로 확대됨
- 인도네시아 은행은 2020년 정책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4%로 네차례 인하
  - 또한 5월에 지급준비율을 200bp 낮추고 거시 건전성 유동성 완충 비율 (macroprudential liquidity buffer ratio)을 같은 금액으로 높이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
  - 9월에는 중소기업이나 수출 지향적인 기업에 대출하는 은행에 대해 적립금을 낮추도록 하는 정책을 2021년 중반까지 확대
- (정책제안) 노동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개혁이 필요함
  - 10월 초 통과된 옴니버스 법안은 노동 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비즈니스 절차를 단순화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개혁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I-15> 인도네시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10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5.2	5.0	-2.4	4.0	5.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3.2	3.0	1.9	2.0	3.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1.6	-2.2	-6.5	-5.8	-4.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3.0	-2.7	-1.0	-0.4	-0.9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16. 이탈리아

- (COVID-19 현황 및 대응) COVID-19 바이러스 감염증은 10월 중순부터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함
  -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에는 3단계 행정명령을 실시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경제활동 및 학교운영 지속에 초점을 맞춤
  - 국가비상사태는 2021년까지 연장되었으며, 기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약 1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원정책이 실시됨
  - 재정지원책으로 공공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금리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중기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경제성장이 필요함
-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재개는 더욱 어려워짐
  -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대출금 상환유예로 3분기에는 산업, 건설, 소매업 부문이 2019년 12월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확진자 수 증가, 활동 제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회복에 제약이 생김
  - 경제회복을 견인해야 할 공공 및 민간투자의 회복이 더딜 경우, 2022년 경기회복 또한 더딜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전망) 올해 급격한 경기위축을 경험한 이탈리아 GDP는 2021년에 4.3%, 2022년에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봉쇄조치와 불확실성은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활동, 투자, 고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실업률은 2021년에는 정점을 찍은 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회복이 전망되나 가계의 예비적 저축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관광 부문은 약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보다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전망) 광범위한 재정지원책은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음

- 재정지원책 규모는 현재까지 약 1,000억 유로(GDP대비 6%)로, 대부분의 정책이 2020년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재정지원책으로 국가의 순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사업(resilience projects)이 본격화되는 2022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제안)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으로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음

- 사법 개혁과 세금 제도 및 규제 간소화는 집행 비용과 공정성 간 균형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조세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역량 강화는 재정정책의 긍정적 과급효과를 높임
- 디지털화는 비공식성(informality)을 줄이고, 세금망을 넓힐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음

<표 III-16> 이탈리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0.8	0.3	-9.1	4.3	3.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2	0.6	-0.1	0.4	0.8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10.6	9.9	9.4	11.0	10.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2.2	-1.6	-10.7	-6.9	-4.4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2</sup>	147.8	155.8	178.7	178.3	177.3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2.5	3.0	2.8	3.0	3.1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17. 일본

- (COVID-19 현황 및 대응) 비상사태 선포 이후 경제는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4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이후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게는 임대 보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등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실시함
  -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부양책 이후 추가 지원책 및 구조개혁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회복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소비와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함
  -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무역 상대국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며 수출은 반등하기 시작했으나,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는 여전히 약세를 보임
- (경제전망)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를 전제로 일본 GDP는 2021년 2.5%, 2022년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제로(0) 또는 마이너스(-)를 보이겠지만 소비와 고용이 개선된다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전망) GDP 대비 0.5%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이 실시될 예정
  - 추가 재정지원이 실시되면 국가부채 규모가 GDP의 240%를 넘어 이미 전례없는 수준에 이른 공공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제안) 경제회복과 가계와 기업 보호를 위한 2차 충격 대비를 정책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음
  - 재확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복원력, 생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주력해야 함

-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여 일과 보육 간 유연성을 높이고, 유연근무제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함
- 재택근무 장려와 온라인 교육 및 정부시스템 접근성 강화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최소화에도 도움이 됨
- 경기 회복기에는 연구 개발, 재생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 증대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 감소에 집중해야 함

<표 III-17> 일본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0.3	0.7	-5.3	2.3	1.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1.0	0.5	0.2	0.2	0.4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2.4	2.4	2.8	2.9	2.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2.3	-2.6	-10.5	-5.5	-3.5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224.2	225.3	241.6	243.3	243.9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3.6	3.6	3.0	3.6	3.9

주: 1.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seasonally adjusted quarterly indices for each year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18. 한국

- (COVID-19 현황 및 대응) 8월 중순부터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며 정부는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함
  - 정부는 285조원(GDP의 15% 수준)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확장재정 정책을 통하여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확장적 재정기조 속에서 마련된 재정준칙은 고령화를 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한국 경제는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일자리는 감소함
  - 2020년 9월 기준 온라인 쇼핑이 전년 동기대비 31% 급증하며 민간소비 회복을 견인함
  - 지난 10월까지 경제전반에 걸쳐 약 42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 (경제전망) 한국경제는 2021년 2.8%, 2022년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경제 성장률은 1.1%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위축폭이 작음
  -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서비스부문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고용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소비와 이천지출의 증가세가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이 투자를 견인할 전망
  - 미중갈등 완화, 세계경제 회복,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이 수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불확실성은 다소 높음
- (재정전망) 노령화로 복지 지출이 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총 정부부채를 GDP의 60%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정책제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제공, 기업의 구조개혁, 직업훈련 및 노동자 역량강화 등을 통한 “뉴딜”정책의 적극 활용이 필요함
  - 가계 지원은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에 집중하여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일시 납부이연, 경감조치도 연장이 필요함
  - 이번 위기가 디지털화와 같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구조개혁, 직업훈련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디지털·그린뉴딜 정책을 실시하여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음

<표 III-18> 한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9	2.0	-1.1	2.8	3.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1.5	0.4	0.5	0.6	1.1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3.9	3.8	3.8	3.6	3.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3.0	0.9	-4.2	-3.8	-3.0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41.9	40.9	43.9	46.3	48.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4.5	3.6	3.8	3.9	4.0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19. 룩셈부르크

- (COVID-19 현황 및 대응) 봉쇄조치를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성공했으나 7월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신규 확진자 수는 다른 EU 국가들보다도 높은 상황이며, 정부는 봉쇄조치의 재 실시 없이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여 확산을 통제할 예정
- 5월부터 시작된 봉쇄조치의 점진적 완화로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급감세를 이어감
  - 구매자관리자지수(PMI)와 소매판매는 지난 4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5월부터는 실업률이 최고치인 7.4%에서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에서도 회복세가 시작됨
  - 그러나 주요 교역국들이 보다 엄격한 봉쇄조치를 재 실시하여 4분기 경기는 위축되었으며 2021년에야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전망) 효과적인 백신이 출시된다는 가정 하에서 GDP는 2021년 1.5%, 2022년 3.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봉쇄조치로 2020년 4분기 수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2021년 경기위축이 예상되나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 및 보급되는 경우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음
  - 실업률은 2021년 7.2% 안팎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말에는 6.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전망) 2020년 대규모 재정확대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재정기조가 다소 위축될 전망
  - 정부는 봉쇄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금 유예, 신규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대출보증융자제도(loan guarantee facility)를 실시함
- (정책제안) 정책지원은 장기적으로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문(교통, 숙박, 식당)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하여 노동력 재배치(job relocation)가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음
- 2021년 6월에 종료되는 고용유지제도(job retention schemes)를 고려하여 노동 활성화(activation) 정책 고안이 필요함

〈표 III-19〉 룩셈부르크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1	2.3	-4.4	1.5	3.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2.0	1.6	0.1	0.9	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5.5	5.4	6.4	7.0	6.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3.1	2.2	-6.1	-6.1	-4.7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28.9	30.0	35.3	42.8	49.4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4.8	4.6	2.7	2.7	3.5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0. 멕시코

- (COVID-19 현황 및 대응) 확산세가 꺾이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일부 주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
  - 2월 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함
  - 최근 확산세가 꺾이면서 안정화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주에서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멕시코 경제는 2분기 들어 극심한 위축을 겪은 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함
  -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멕시코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반등하기 시작
  - 노동인구는 2분기에 1,200만명이 줄어들었으나 이후 800만명 가량 증가하며 노동시장도 개선되기 시작함
  - 그러나 금융 및 환대(hospitality) 부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경제전망) 2020년 급격한 경기침체 이후 멕시코의 GDP는 2021년 3.6%, 2022년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된 제조업 부문 수출이 회복을 견인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개선, 효과적인 백신 출시에 따른 신뢰도 상승 등의 복합요인에 의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충분한 유휴 생산능력(spare capacity)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번 대유행으로 빈곤, 불평등, 성 격차(gender gap)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전망)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보건부문 지출을 상당한 규모로 증가시켰으며 조정된 우선순위는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통해 의료 인력 5만명을 추가 고용하고 인구의 90%가 접종 가능하도록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사전구매할 수 있게 됨

- (정책제안) 불경기가 지속되는 경우, 재정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는 여전히 재정여력이 있어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경우 대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비공식 및 공식 부문 종사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세(payroll tax)를 감면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보건 시스템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진단검사-추적-격리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 개선이 필요함

<표 III-20> 멕시코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2	0.3	-9.2	3.6	3.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4.9	3.6	3.4	3.2	3.0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3.3	3.5	5.3	5.0	4.8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2.1	-0.3	-0.2	-0.5	-0.9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volatile items: agricultural, energy and tariffs approved by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based on National Employment Survey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1. 네덜란드

- (COVID-19 현황 및 대응)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여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차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보다도 더 많은 감염 건수가 기록됨
  -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접촉자 추적이 어려워지자 공공장소가 임시 폐쇄되는 등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규제가 강화됨
- 2분기 경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극심한 침체를 맞고 있음
  - 전례없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 조치 내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경기위축을 면할 수 있었음
  - 중소기업 대출보증과 같은 주요 지원책이 2021년 7월까지 연장됐으며, 2020년 발생한 영업세(business tax)는 최대 2년까지 유예됨
- (경제전망) 가계가 예비적 저축 규모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서 네덜란드의 GDP는 2021년 0.8%, 2022년 2.9%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지원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2021년 하반기에는 실업과 파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음
- (재정전망) 공공부채는 2019년 GDP의 49%에서 2022년 6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제안) 정책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함
  - 정부는 2021년 7월까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돕는 지원정책을 연장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유럽 회복 및 복원력 기금( EU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으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금 사용은 낮은 생산성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표 III-21> 네덜란드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3	1.6	-4.6	0.8	2.9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1.6	2.7	1.0	0.9	1.1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3.8	3.4	4.1	6.1	6.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1.4	1.7	-6.4	-8.0	-5.9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66.0	62.5	69.7	76.8	81.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10.8	9.9	9.5	9.8	9.1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2. 뉴질랜드

- (COVID-19 현황 및 대응) 지난 6월, 마지막 확진자가 회복되면서 정부는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으나 8월 하반기에 다시 지역감염이 발생함
  - 재확산이 시작된 오클랜드 지역에 봉쇄조치를 실시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폐쇄하며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함
  -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에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재실시되며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음
- 강력한 봉쇄조치로 이동성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의 실질 GDP는 OECD 평균과 비슷함
  - 현재 가계와 기업은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부양책(GDP 대비 20%) 중 70%가 2021년 6월까지 실시될 예정임
    -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임금 보조금 정책은 GDP의 4.5%인 140억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봉쇄조치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함
      - 대규모 임금 보조금 제도는 자격 조건이 강화되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0년 11월에 종료될 예정
- (경제전망) 뉴질랜드 경제는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약 2%의 성장이 예상됨
  - 실업률 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과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투자 둔화가 예상되며,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해 점진적인 회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효과적인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경우,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음
- (정책제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수 있음
  - 2020년 하반기 경제활동이 뚜렷한 반등을 보이는 경우,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

도록 더 많은 재정 및 통화정책이 실시되어야 함

- 또한 지원책들이 종료되면서 발생 가능한 실업률 상승에 대비해야 함
  - 복지제도 개혁과 실업보험의 도입 등 이직 기간 동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함
  - 충격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노동력을 재분배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표 III-22> 뉴질랜드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0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2	2.2	-4.8	2.7	2.6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1.6	1.6	1.6	1.1	1.6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4.3	4.1	4.9	5.8	5.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1.2	0.6	-9.1	-8.5	-5.5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34.0	32.6	43.8	48.2	53.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4.2	-3.4	-1.6	-2.7	-2.9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3. 노르웨이

- (COVID-19 현황 및 대응) 노르웨이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차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수는 1차 확산 당시의 최다 기록을 넘어섰으나 사망률은 크게 늘어나지 않음
  - 자택대기령과 환대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있었을 뿐 기업 활동과 학교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폐쇄는 실시한 바 없음
-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부양책 규모는 GDP대비 약 4%에 달함
  - 재정부양책의 3분의 1은 대유행으로 일시 해고되거나 병가를 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됨(고용주의 지불 부담 완화)
  - 2021년 국가예산은 연구개발비 증액,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제공과 같이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경제전망) 노르웨이 GDP는 2021년 3.1%, 2022년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효과적인 백신이 출시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야가 회복되고 신뢰도가 반등하여 2022년에는 보다 강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며, 여행, 레저, 환대 부문의 경제활동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위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로 인한 거시금융의 안정성 (macro-financial stability)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음
- (재정전망)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나, 향후 지원책이 종료되고 세입이 반등함에 따른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됨
- (정책제안) 정책입안자들은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준비를 시작해야 함

- 가계대출과 관련한 거시금융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고 새로운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 2021년 국가 예산안에서 제안된 ① 업무복귀 장려, ② 사업환경 개선, ③ 녹색 성장 촉진에 초점을 맞춘 회복정책 고안이 필요함
- 재정준칙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충분한 여력을 주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함

<표 III-23> 노르웨이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sup>1</sup>	2.2	2.3	-3.2	3.1	1.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2</sup>	2.7	2.2	1.5	1.9	1.9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3</sup>	3.8	3.7	4.5	5.0	4.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4</sup>	7.8	6.2	-1.3	1.8	2.2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4</sup>	45.6	46.8	31.6	-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4</sup>	7.1	4.1	3.4	4.0	3.7

- 주: 1. GDP excluding oil and shipping  
 2.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3. percentage of labour force  
 4.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4. 포르투갈

- (COVID-19 현황 및 대응)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부담은 1차 확산때 보다도 감소
  - 정부는 11월 초에 부분적인 봉쇄조치를 재실시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함
    -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5명 이상 모임 금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택근무 권장 등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
  
- 여름에는 경기가 회복되며 경제 활동과 신뢰도가 반등했으나, 회복의 정도는 부문 별로 상이함
  - 소매부문은 빠르게 회복하여 7월 신용카드 결제액이 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했으며, 건설 부문은 봉쇄조치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여행 및 관광 부문은 2020년 3/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으나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며 다시 악화됨
  
- (경제전망) 2020년 8.4% 감소한 포르투갈 GDP는 2021년에 1.7%, 2022년에 1.9% 성장할 예정
  - 억눌린 소비심리가 분출하며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나 관광부문과 교역 상대국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경우 수출은 더욱 위축될 수 있음
  - 그러나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는 경우, 관광과 환대 부문에서 광범위한 회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은 2021년에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22년 말까지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부채는 2022년에 GDP대비 1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전망) 재정적자는 일부 재정지원이 종료되고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2022년에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차세대 EU계획(next generation EU plan)에 따라 포르투갈은 132억 유로(GDP 대비

3.8%)를 지원받게 되며 이는 2021~2022년 재정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책제안) 추가 재정지원책의 선별적 실시는 자원 및 노동력 재분배를 촉진할 수 있음

- 정부는 회복이 일단 공고화되면 지원책을 점진적으로 종료해야 하며, 정부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성장이 유망한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분쟁해결제도 개선, 사법제도의 효율성 제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직무중심 직업훈련 제공은 자원 및 노동력 재분배를 촉진할 수 있음
- 구직자 수가 급증하는 경우 새로운 직업, 분야,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표 III-24> 포르투갈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8	2.2	-8.4	1.7	1.9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1.2	0.3	-0.2	-0.2	0.3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7.0	6.5	7.3	9.5	8.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4</sup>	-0.3	0.1	-7.3	-6.3	-4.9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4</sup>	137.8	136.8	155.7	159.3	158.3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4</sup>	0.4	-0.1	-0.4	-0.6	-0.7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based on national accounts definition  
 4.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5. 스페인

- (COVID-19 현황 및 대응)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정부는 2021년 5월 9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정부는 광범위하고 선별적인 정책지원을 실시함
  - 기업 및 자영업자의 신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400억 유로(GDP대비 3.2%)규모의 추가 대출보증 기금을 설치함
  - 또한 160억 유로(GDP대비 1.3%)규모의 COVID-19 기금을 설치하여 의료부문 및 교육부문을 지원함
  - 단시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세입자 지원은 2021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
- (경제전망) 2020년 급격한 경기위축 이후, 스페인 GDP는 2021년 5%, 2022년 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이동제한과 여행 및 관광에 대한 규제는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대유행으로 야기된 높은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침체로 민간 소비는 부진한 상태이지만, 외부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회복되고 경제성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정책제안) 정책은 노동력 재분배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해야 함
  - 봉쇄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지원을 계속하는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 전망을 개선해야 함
  - 공공고용 서비스의 개별적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기술 향상을 촉진하고 노동수요구조에 맞춘 기술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함
  - 국가 혁신 정책을 강화하여 혁신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 채택을 촉진하여

- 기업 성장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야 함
- 국가의 경제 회복 계획은 디지털화와 녹색투자(green investment)촉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환경성과(environmental outcomes)개선을 위한 야심찬 구조개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단기적인 재정지원책 외에도 노동력 및 자원 재분배를 위한 보다 강력한 노동시장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표 III-25> 스페인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4	2.0	-11.6	5.0	4.0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1.7	0.8	-0.3	0.4	0.6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15.3	14.1	15.8	17.4	16.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2.5	-2.9	-11.7	-9.0	-6.6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114.5	117.3	139.1	142.3	144.3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1.9	2.1	1.4	1.9	1.9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6. 스웨덴

- (COVID-19 현황 및 대응) 9월 이후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스웨덴 보건국은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 규정을 강화하고, 밤 10시 이후의 주류 판매와 접대를 금지함
  - 봉쇄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식당, 교통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음
-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재정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의 2%인 1,050억 달러, 2022년 예산안의 1.7%인 85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대응책을 내놓음
  -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감면과 소득세 감면은 고용과 가계 구매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보다 강력한 실업 보상(unemployment compensation)과 직업 재교육은 실업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경제전망) 스웨덴 경제는 위기로부터 점차 회복하고 있으며, 경제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실업률과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는 위축되고 저축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 또한 부진함
  - 그러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된다면 소비는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세계 무역긴장 고조와 영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협정 부재는 수출과 투자를 억제하여 경제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음
- (정책제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함

- COVID-19 위기는 이미 존재하던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종사하는 청년, 저숙련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 중 대부분이 이번 위기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음
  - 새로운 분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
- 취약계층이 필수적인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노년층이 돌봄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

<표 III-26> 스웨덴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4	1.4	-3.2	3.3	3.3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2.0	1.8	0.6	1.1	1.2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6.3	6.8	8.6	9.0	8.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0.8	0.5	-4.0	-3.8	-2.3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2.5	4.2	5.4	4.8	4.9

주: 1. consumer price index includes mortgage interest costs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historical data and projections are based on the definition of unemployment which covers 15 to 74 year olds and classifies job-seeking full-time students as unemployed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7. 스위스

- (COVID-19 현황 및 대응) 봉쇄조치가 종료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10월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함
  - 일부 주에서는 비필수 사업장 폐쇄와 같은 보다 엄격한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검사, 추적, 격리 조치도 여전히 철저히 실시되고 있음
  - 봉쇄조치가 비교적 일찍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운송, 건설 등 여러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소비심리는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기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GDP의 약 6%에 달하는 대규모 정책지원이 실시됨
  -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코로나 소득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2021년 중반까지 연장함
  - 대유행이 고용시장에 끼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보증을 제공하거나 일부 세금을 감면 혹은 면제해줌
- (경제전망) 스위스 경제는 2021년에 2.2%, 2022년에 3.4%로 반등한 후 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불확실성과 실업률로 인해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됨
  - 바이러스의 2차 확산으로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나 2021년 후반에는 백신 보급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교역 상대국의 수요 부진과 스위스 프랑의 강세로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조치 또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침
- (정책제안)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간소화된 규제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어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춘 훈련과 재숙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음
- 노동력과 자본의 빠른 재분배를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훈련 및 재교육,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가 필요함
- 은행들이 유동성 문제없이 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위스 중앙은행은 코로나 채용자(CRF)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표 III-27> 스위스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0	1.1	-4.7	2.2	3.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0.9	0.4	-0.7	0.2	0.4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4.7	4.4	4.9	5.2	4.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1.3	1.4	-4.4	-3.8	-2.5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39.4	38.1	42.0	45.9	48.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8.6	10.9	6.4	5.8	6.5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8. 터키

- (COVID-19 현황 및 대응) 확진자 수는 4월, 5월에 정점을 찍은 후 봉쇄 조치로 감소세를 보이다 조치가 완화되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2차 확산세를 꺾기 위해 10월과 11월에 새로운 봉쇄조치가 실시되었지만,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수 있음
- 3분기에 회복된 경제는 다시 역풍을 맞고 있으며 점진적 회복이 예상됨
  - 대규모 재정부양책, 통화정책으로 3분기 경기는 회복되었고, GDP의 4%, 고용의 7%를 차지하는 관광부문이 관광객 유입으로 부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음
  - 그러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 외부 수요 약화, 불확실성 증가, 2020년 4분기의 추가적인 통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전망은 불투명해짐
- (경제전망) 2차 확산으로 다시 위축된 터키 경제는 2021년에 2.9%, 2022년에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상당한 기업과 가계의 부채수준과 바이러스의 재확산은 민간 소비를 더욱 제약하며, 침체된 국제 무역 환경은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침
- (재정전망) 경상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재정정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발채무와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함
- (정책제안) 거시경제정책 프레임워크와 구조 개혁에 대한 신뢰구축이 중요함
  - 거시경제정책 프레임워크를 공고히 하고 모든 재정 및 준재정 활동에 대한 중기 (medium-term) 경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짐
  -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봉쇄조치가 실시될 수 있음

- 바이러스의 확산, 검사, 추적, 치료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필요함
- 통화, 금융, 재정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개선하는 것이 국내외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표 III-28> 터키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0	0.9	-1.3	2.9	3.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16.3	15.2	12.0	11.9	9.5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11.0	13.7	12.5	14.8	15.3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2.1	1.2	-2.9	-2.7	-3.1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29. 영국

- (COVID-19 현황 및 대응)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다시 정점에 도달했으나 중증환자 비율 및 사망률은 4월 최고치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의료시스템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영국은 자택 대기령과 비필수 영업장에 대한 영업 제한 등이 적용되는 3단계 제한조치를 실시함
  -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는 봉쇄조치가 강화되었으며, 10월 말 웨일즈에서는 2주동안 전국적인 봉쇄조치가 실시된 바 있음
- 정부는 위기 초기에 시행된 지원조치들을 확대 및 조정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내놓음
  - 예산책임청(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2020/2021 회계연도에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및 검사 능력(testing capacity)을 강화하기 위한 재량 지출이 GDP의 16%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 제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임금의 80%까지 적용됨
    - 해당 제도로 많은 일자리들이 보호받고 있어 2021년 실업률은 7.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전망) 영국 GDP는 봉쇄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 4분기에 위축된 후, 2021년에 4.2%, 2022년에 4.1%로 반등할 전망
  - 성장세는 공공 지출과 소비 회복에 따른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지속되는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수입과 수출에는 관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전망) 정부순융자(government net lending)는 2020년 GDP대비 16.7%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총채무(gross public debt)는 2022

년에 GDP대비 1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제안) 경기대응책은 가능한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함

- 이번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 이행이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
  -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은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는 추가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여 공중보건 상황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함
-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수출입 산업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제한하기 위해 필수적임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의 분명한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긴축기조로 전환되어서는 안되며, 재정정책 또한 경기회복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가능한 오랜 기간 유지되어야 함
- 공공투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함

<표 III-29> 영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3	1.3	-11.2	4.2	4.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sup>1</sup>	2.5	1.8	0.8	0.7	1.5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2</sup>	4.1	3.8	4.6	7.4	6.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3</sup>	-2.2	-2.4	-16.7	-13.3	-8.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113.9	117.3	145.3	157.4	160.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3</sup>	-3.7	-4.3	-2.6	-3.6	-3.4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 30. 미국

- (COVID-19 현황 및 대응)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9월 중순 이후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지며 현재 1,2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5만명 이상이 사망함
  - 전국적으로 검사 역량(testing capacity)이 향상되었고 검사 횟수도 급격하게 늘어남
-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약세를 보임
  - 미국 경제는 2020년 2분기에 역사상 가장 급격한 위축을 겪었으며, 비 농업부문 고용인수(non-farm employment)는 3월과 4월에 약 2,200만명 감소함
  - 이후 봉쇄조치가 완화되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 10월까지 손실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복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음
    - 구글의 이동성 지수에 따르면 식당, 카페, 쇼핑센터, 영화관에서의 활동량이 대유행 시작 시점보다 약 20%낮음
  - 이들 산업에는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어, 이번 위기가 소득 불평등의 장기화를 촉발시킬 위험이 있음
- (경제전망) 2020년 3.7% 감소한 GDP는 2021년에 3.2%, 2022년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과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로 수출 호조가 기대됨
  - 실업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겠으나 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하반기에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는 경우,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제안) 현재 진행 중인 거시경제 정책은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하며 백신은 생산과 분배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함
  - 근로자가 영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업종에서 전망있는 업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재교육 서비스가 개선되고 확대되어야 함
  - 거시경제 정책 지원은 봉쇄조치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기업에 선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세수 감소로 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은 유지되어야 함
  - 백신 개발 및 승인에는 생산 및 분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엄격한 접종 절차는 향후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표 III-30> 미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0	2.2	-3.7	3.2	3.5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1</sup>	3.9	3.7	8.1	6.4	5.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2</sup>	-6.3	-6.7	-15.4	-11.6	-8.3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2</sup>	106.6	108.4	128.0	134.2	136.3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sup>2</sup>	-2.2	-2.2	-3.4	-4.0	-4.1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8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